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반석빌딩 6층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국감(21-2)-사실상 야당도 안보도 없고, 참 애국심도 법치도 실종

- ▶ 모든 상임위에서 “단군 이래 최대비리” 라는 “성남시 대장동 등의 토건비리” 질타
-- 피감기관장들 답변회피/책임회피 -- 척결/규명 못하는 국회에 국민분노 --
-- 국민의힘, 전체 상임위에서 국감첫날 “이재명 게이트 특검요구” 팻말 --
-- 최대부패사건 척결위한 특검도 거부, 증인(152명) 1명도 채택못한 -죽은국감
- ▶ 국정감사에서 코로나(C-19) “정치방역과 백신사망 등” 의혹제기,
-- 백신 부작용 사망관련 자료제출도 거부, 부적절 방역으로 자영업자 등 초토화
- ▶ 법치국가 마지막 보루인 대법관(권순일)의 뇌물성 화천대유 취업과 재판농단 의혹
- ▶ 북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은 북한은 적이 아니라고 답변
- ▶ 촛불정신에 반하는, 캠프/코/더 낙하산 인사들의 무능과 유착/국정농단 줄줄이

문정권 5년차, 국정감사는 형해화 - 중간(간이)평가 “C-학점”

국감의 주역일 “국민의 힘” - 용장도 지장도 없이 헛발질만!

여당도 국익을 위해 국정을 제대로 감사해야 함에도, 부정비리 감싸기 급급!

- ▲ 국감일순 축소(15대 이후 평균 175일 → 21대 136일) 감사기관은 증가(15/16대 375개 → 21대 745개)
- ▲ 실망스런 상임위 -- 대장동 의혹 관련 피켓 때문에, 감사 첫날부터 파행한 국
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간사 기동민 성일종)
- ▲ 황당 피감기관장 -- 주적개념의 변화로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없다는 외교부
장관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기재부 장관

1. [평가개요] 지난 23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평가해온 우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김대인 외 22인)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를 전방위 비대면 모니터하여(대체휴일 제외 감사일정의 절반인 10월 13일(수)까지 종합) 국감을 중간(간이)평가합니다. <국감정밀평가 및 국민복합 시상금 국감 종료후 정밀평가과정을 거쳐 12월 중순 발표예정임>
2. [국감성적] 우리 국정감사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 2년차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지 34년째 국정감사, 내년 대선(2022. 3. 9.)의 전초전 국감인 금년도(21-2) 국정감사 절반을 “C- 학점” <작년엔 D학점>로 평가합니다.

금년 국정감사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비리라는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의 피켓과, 전 상임위에서 **여야간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호화 고문단'** 영입목적 및 대가성 의혹,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자의 배임 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뿐** 최종 결정자, LH공사가 사업 철회한 이유,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및 **“50억원 클럽”공개** 등 의혹제기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청와대 게시판**에서만 논란이 되는 백신 안전성과 피해 문제 등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주권의식과 알권리”**를 충족하는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고의적인 국정감사 파행 및 지연이 많았으며, 피감기관 수는 대폭 늘었음에도 대체 공휴일로 인해 **국감일수는 크게 줄어 들었고**(대부분 상임위는 주4일 국감을 함), 마이크 중단으로 소리 없는 국감을 하면서도 대부분 초저녁에 서둘러 국감을 종료하는 등 **형식적인 국감행태**와 대선 전초전으로, 대선 유력주자의 의혹 등만 언론에 보도되는 문제 등을 감안한 평가입니다.

《2021년도 국정감사 전반전의 긍정/부정 평가점》

긍정적 평가점	부정적 평가점
① 대장동 관련 자료에 입각한 의혹제기(대선 주자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관련 대법관과 화천대유 김만배와의 8회 만남 등)	① 15대 국감이후로 가장 짧은 국감일수, 가장 많은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겉핥기 국정감사
② 위드 코로나 시행 11월 9일, 백신 피해자 공개 증언	②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국감모니터위원들이 없어지자 유난히 텅 빈 감사위원석
③ 촛불정권에도 낙하산 인사 여전. 캠프(캠프)/코(코드)/더(더불어민주당) 인사의 국정농단 줄줄이	③ 부실자료 및 자료제출거부, 필요한 핵심증인 채택 무산
④ 지난해 시정조치 내역 점검하는 의원 늘어	④ 양대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으로 관심분산

《참고》 제20대 국회 첫째 국정감사는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F’ 학점을 받았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기승전 조국’ 국감으로 ‘D’ 학점이었고, 지난해는 코로나(COVID-19) 첫 국정감사로 ‘D’ 학점이었음.

3. [국감평가]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Lord Acton)” 국민의 최고대표기구인 국회가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1)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2)정부의 정책집행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시정케 함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3)국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우리 NGO모니터단도 이러한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 감사위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으로 선정/격려해오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3~72쪽)은 모니터단(GoodLaw.org)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담당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goodlaw@goodlaw.org / www.GoodLaw.org

2021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 개요

1. [국감행태]

- ①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동영상(주로 뉴스)을 재생하거나, 자기 의견을 길게 발표하는 정견발표형 국감으로 퇴보하여 일대일 질의답변을 통한 생동감 있는 감사라는 국감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했다.
- ② 감사일정은 대폭 줄고, 코로나 위기라면서도 지난해보다도 40개가 증가한 745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선정했다.
- ③ 국감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을 하지 않고 21일 국감을 고수한 채, 감사일정은 대체 공휴일로 인해 3일 국감하고 4일 쉬는 3감4휴 국정감사를 하였다.
- ④ 국감기간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여전하고,
- ⑤ 태부족한 감사시간을 ‘대장동’ 팻말이 국회법 148조¹⁾ 위반인지, 정치적 표현인지 논란으로 불필요한 파행을 반복하며 낭비(?)하였다. 《다행히 위원별로 협의가 이루어져 순차적으로 양당의 국회의원 앞 손팻말을 제거하기로 하였음》
- 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질의참고를 위해 켄, 물병, 병 등을 이용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수조, 산업용 안전벨트(윤준병 의원), 문광위에서는 게임VR 시연(이성현 의원), 국토위원회에서는 양가면 개인형(송석준 의원) 등 소품이 등장하였으나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윤준병 의원은 수조에서의 물고기가 죽어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비난성명을 받기도 하였음》
- ⑦ 법사위(위원장 박광온), 정무위(위원장 윤재옥), 행안위(위원장 서영교)에서 대장동 관련 증인신청에 대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하는 등 맹탕국감도 여전하였다.

2. [최대이슈]

① 대장동 국감 : 판교 대장동(이재명) 게이트 vs 국민의힘 게이트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하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천하동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1)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진행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게이트' 라고 하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박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쟁점이 되었고, 기재위는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법사위에서는 전 대법관의 관여여부와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에서의 영향력 행사 여부가 집중되었다. 그 외 정무위와 국토위 등 대부분의 상임위 국감장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다.

② 플랫폼 국감 :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올해는 네이버, 카카오 등 IT기업인 위주로 국정감사 증인이 채택되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플랫폼 기업인들이 위원회별로 겹치기 증인으로 채택되어 기업 자체의 문제와 중소기업, 골목상권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호통과 질책을 들었다.

③ 손팻말 국감 : 손팻말에 리본, 마스크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 등의 피켓과 마스크와 리본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父) 집, 박상도(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50억 클럽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등의 손팻말이 나타났다. 비교협단체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안합니까. 적당히들 하세요'라는 손팻말을 전시했다.

이 때문에 10월 1일과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손팻말'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이 팻말로 인해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되었다는 평가이다.

3. [최대관심]정은경 질병관리청장,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이달(10월) 마지막 주 초쯤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주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 시민들의 피로감이 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감한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불편·분노케 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과학적이지 않은 정치방

역조치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4. [실망 국감장]

① 국방위(위원장 민홍철)의 국방부 국정감사

10월 5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무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설치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피켓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시작되지 못했다.

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이원욱)의 '버르장머리' 파행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5일 오전 10시에 개시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 진행 절차를 놓고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 간에 고성이가 오가는 다툼이 벌어졌다. 이원욱 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 없게”라는 말을 하였다.

③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이채익)의 특혜성 이견희 콜렉션 관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소속 의원들이 10월 7일 무려 11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 5시 23분경에 서둘러 마치고, 야밤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고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작품들을 관람하였다. 이에 ‘여야 의원들의 특혜성 관람’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논란이 야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8일에도 현장시찰을 하였다.

5. [피감기관] 어느 나라 공직자인지 의문시된 답변들

① 성남 판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책임회피 소극답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면서 또 국민들을 절망케 한 대장동 게이트는 많은 국가기관과 관련이 있었으나 정작 공직자들은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듯한 답변을 이어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장동 감사에 대해 “직무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고,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NH공사가 직접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그 “당시에 재직 중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김대지 국세청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세무조사나 금융조사와 관련해서 “수사과정을 지켜 본 후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화천대유의 담합여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하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② 정의용 외교부장관 “안보개념 변화로 북한은 주적 아니다?”

10월 1일 외교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에서는 9월 30일 북한의 근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이 UN연설과 국군의날 행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을 질타하였다. 또한 북한의 계속된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요구조건을 계속 들어주고 있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석기 의원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고 질문하자 외교부장관은 “주적개념이 변화하였다”고 답변하여 많은 국민을 경악케 했다.

김석기 의원)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씀을 한 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어제와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도발이 계속 되는 데에도 북한이라는 말을 굳이 안 하십니다. 우리 외교부장관은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아녜요?
정의용 장관) 주적 개념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주적개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보개념이 바뀐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연설과정에서 우리 군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를 밝히시고, 또 우리 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그러한 계획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김석기 의원) 아니, 우리 군을 신뢰하고 국방력을 강화한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대통령이 굳이 북한이라는 말을 한 마디도 안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10월 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임에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고 발언하였다.

③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실패라기 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 다 했다”

서병수 의원이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가, 성공했다고 평가하는가”를 묻자, 기재부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정책적 조치는 전부했다”고 답변하였다. 잘못했음을 인식해야 정확한 대책마련이 가능한데,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더 할 정책도 없다면 앞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서병수 의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세요,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홍남기 기재부장관) 예, 의원님 뭐 여러 가지 경제정책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전 국민이 밀접하게 관련이 된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정책적 처방은 전부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서병수 의원) 아니 결과적으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홍남기 기재부장관) 제가 뭐 그렇게 평가하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과 올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해서
서병수 의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송영길 민주당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애매 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10월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④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북한 퍼주기 연구서 관련 ‘용역일뿐’ 답변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정부가 북한 관광 개발을 위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을 담아 보고서(용역비 3억)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황희 문체부장관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연구한 것으로 연구용역 차원일 뿐 전혀 실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북한은 사실상 리스크를 거의 감당하지 않으면서 관광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받아가는 이상한 구조”라며 “어떻게 하면 국내 자본을 수월하게 북한으로 유입시켜 북한관광자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회피할 수 있을지 고민이 담긴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저출산문제에 대한 무대책 답변

보건복지위원회의 10월 6일 국정감사 첫날 이달곤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문제를 지적하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정책을 개발해야지 돈을 주는 정책만 계속 하고 있다”라며 “돈은 나가고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장관 업무 범위에서 세계 최악의 결과가 나왔으니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정감사는 여태까지 한 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유가 뭔지를 따지는 자리”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대답은 국정질의해서 하면 된다. 장관과 청장의 답변이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다. 너무 심하다”라고 질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위험상황 등을 대통령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달려가서 보고했냐”고 물으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며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권덕철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6. [자료부실/지연]

①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감전날 자료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12시간 전에야 법사위 요구자료 제출한 대법원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대법원은 9월 30일 밤 10시경에야 법사위가 의결해 요구한 국감용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연구관의 의견서는 끝끝내 제출을 거부하였다.

② 외교부의 소속정당 이름 틀린 자료 제출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및 부실 실태를 조목 조목 PPT로 지적하기도 하였고, 국민의힘을 국민의

당이라고 표시하거나, 무소속이라고 표시하여 외교부의 국회무시(정신나간)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③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의 자료제출 거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은 10월 6일 ‘백신 이상반응 인과관계’ 자료제출 미흡을 지적했다. 질병청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상반응 관련 신고자료에 의무기록 등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다.

7. [국감성과]

- ① 법치와 정의를 유린하고, 사법비리 의혹까지 들게 한 성남 판교 대장동 게이트 사태를 실시간으로 질의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알권리를 보장하였고,
- ②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퍼져 있는 관피아 낙하산 인사와 캠프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확인하였으며,
- ③ 플랫폼 기업의 확장과 중소기업, 골목상권간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되었고,
- ④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서만 듣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감사장에 나와 코로나19 백신 피해 호소 등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8. [국민소통] 국회의원의 82.2%(185명)는 네이버 블로그를 자신의 홈페이지로 소개

국정감사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해 실시간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지를 조사해 본 결과(10.9~10), 국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공개하고 있는 의원은 전체 감사위원(295명)의 76.27%인 225명이었다.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국정감사 자료를 게시하고 있는 의원은 141명으로 과반이 안 되는 47.80%였다. 국회의원 소개란 홈페이지에는 개인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북, 네이버 블로그 등이 소개 되어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소개해 놓은 의원이 185명으로 82.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대표 등이 국감장(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불려와서 플랫폼 기업과 고용 여건 관련 질타를 받은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9. [국감개선]

- ① 국회의원(감사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해도 시정/개선하지 않고 피감기관장은 “예, 알겠습니다”만 하고, 올해에도 감사위원들이 “작년 국감에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라며 시정조치가 되었는지를 감사장에서 확인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시정조치의 여부를 끝까지 제대로 점검해 ‘그 나물에 그 밥’ ‘붕어빵’ 국감을 근절해야 한다**(시정조치는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명기하여야 할 것).
- ② 또한,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도 보강해, 실시간 시청 중 버퍼링 현상, 화면정지 등도 개선해야 한다.
- ③ 이번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하루에 10개 이상의 피감기관을 선정하여 감사를 하는 날이 135일 중 25일로 지난해 21일보다 많았다. 하루에 여러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정하여 하루 종일 한 번만 답변을 하거나(10. 7. 교육위의 충남교육청)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하는(10.5. 교육위의 사학진흥재단, 고전번역원) 피감기관도 많아, 무더기 피감기관 선정을 근절해야 한다.

[참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0월 18일 월요일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할 예정인데, 2016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변경후 국감상황을 보면 질문을 받지 못한 기관수가 많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 국정감사》

연도	구분	피감기관 수	질의를 못받은 기관수	비고
2017 (20대 국회 2차)	1일차	26	6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예” 한마디 답변 제외
	2일차	26	6	
2018 (20대 국회 3차년도)	1일차	26	9	
	2일차	26	4	
2019 (20대 국회 4차년도)	1일차	27	3	
	2일차	25	6	
2020 (21대 국회 1차년도)	하루	53	7	22개 기관만 출석요구함

[조사] 국회 연도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1. 9. 28.~30)

- ④ 국정감사시 요구자료에 대해 거부를 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따라 주무장관의 해명 또는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거짓으로 제출하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징계조치를 촉구해주시시오. 말로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가 왜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국정감사 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징계촉구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석기 간사, 2021. 10. 1.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21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중간평가 개괄보고서

《 목 차 》

I. 제21대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전반 간이총평	11
1. 제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 전반의 성적은 “C-”학점	11
2. 전반전에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	17
3. 상임위 국감 활동 및 이슈 《국회법 37조 순》	21
(01)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 화천대유와 전 대법관 그리고 고발사주	21
(02) 정부위원회(위원장 윤재옥) : 대장동 게이트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의혹	22
(03) 기획재정부(위원장 윤후덕) : 가상자산 과세,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공과	23
(04)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난맥상 점검	24
(0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 플랫폼, 탈원전, 방송의 공정성	25
(06)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 : 종전선언 논란	25
(07)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 국방부 국정감사 무산, 비핵화 진전 없다.	26
(08)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 대장동 게이트와 공정선거관리	26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 발농작물과 해양쓰레기	28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 에너지전환과 상생	29
(12)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 위드 코로나와 백신 부작용	31
(13)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 : 광상도와 인국공	32
(14)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현승) : 대장동 게이트	33
4.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진행 발언과 기자회견	33
5. 국회사무처의 가이드라인	36
II. 2021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36
1. 2021년 국정감사의 행태적 특징	36
(1) 손팻말 관련 파행	36
(2)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 부실국감	38
(3) 심야국감은 겨우 4번, 열의를 가진 국감진행 안돼	40
(4) 조기 종료 국감은 7개로 도로 늘어	41
(5)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다시 시작	42
(6) 박용진, 하태경, 홍준표 대선경선 후보의 국정감사 불출석	42
(7) 국정감사장에 줄다가 지적당한 피감기관장	43
2. 2021년도에도 여전한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	43
3.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캄캄	44
4.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열전	46
5. 2021년도 국정감사에 나타난 낙하산 내지 캠퍼코더 인사 논란	50
6.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협회 등 유관기관의 비리 등 문제	53
III. 2021년도 국정감사 전반의 화제성(話題性) 자료	56

1. 관심을 끈 국정감사장의 '사과'	56
(1) 홍남기 부총리의 '초과 세수 사과'	56
(2)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논란 사과'	56
(3) 기동민 의원의 국정감사 '파행 사과'	57
(4)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의 '재차 사과'	57
(5) 임지현 관세청장의 '유령청사 사과'	57
(6)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불가리스 사과'	58
(7) 국정감사장에 꾸벅꾸벅하다가 “꾸벅” 사과	59
2. 감사활동에 대해 사과요구를 당한 의원	59
(1) 문화체육관광위 정청래 의원	59
(2)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59
 IV. 매일매일 깜짝 놀란 통계 및 자료 편린	60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국회의원 게시 감사자료* 중심)	
1. 2021년 10월 1일(금)	60
2. 2021년 10월 5일(화)	62
3. 2021년 10월 6일(수)	63
4. 2021년 10월 7일(목)	66
5. 2021년 10월 8일(금)	68
6. 2021년 10월 12일(화)	70
 《참고 : 자료 22년간 국정감사 총 감사일수와 대상기관수 현황》	72

I. 제21대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절반 간이총평

1. 제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 절반의 성적은 “C-” 학점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의 전반전 성적을 지난해보다 높은 ‘C-’ 학점으로 평가한다.

(1)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의 권능으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대표자들인 국회의원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지, 영토를 보위하며 국리민생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집행을 총 점검하는 중요한 국정감사이고,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임에도 국정

감사의 본업보다는 대선 전초전이 되어 대선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 국감으로 진행되었다.

《국감시작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각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9월 30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국감, 코로나19로부터 민생을 회복하는 포용국감,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안전 평화국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9월 30일 최고위에서 정무위 증인채택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며 국회를 ‘이재명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감 회의장에는 2인 1개로 사용하던 마이크가 1인 1개로 배치됐으며 좌석마다 비말방지용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고, 집합 인원 50명 제한 권고에 따라 국감장 참석 인원을 줄이고 비대면 영상 국감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2) 전반전 실망

- ① 국감직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안보위기 상황임에도 국방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손팻말 싸움으로 무산되었고, 외교를 전담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군의 날 국정감사를 하면서 ‘중전선언’ 논란만 하였다.
- ② 추석 전 불거져 나온 법과 정의를 유린하고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 사건으로 국민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와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힘이 신청한 관련 증인이 한명도 채택되지 않는 등 사실상 판교 대장동 의혹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여 실망감을 주었다.

《단군이래 최대 비리라고 하는 대장동 사태에 대해 속터지는 공직자들의 답변》

위원회/ 일자/ 파검기관	질의 의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내용
정무위 10월 1일 국무조정실	윤창현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정부 합동부패예방추진단 차원에서 상황을 검토해달라	구윤철 국무조 정실장	이 사안의 팩트는, 지자체의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것이다. 지자체 고유사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들어갈 수 있냐고 하는 이슈가 있고, 민간인들이 다수

위원회/ 일자/ 파irim기관	질의 의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내용
				개입했는데, 민간인들은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행정안전위 10월 1일 행정안전부	박완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권을 갖고 있다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정 비리 문제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느냐. 앞으로 감사할 계획이 있는가	전해철 장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직접 감사하지만, 공공기관(성남도 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하고 있다특히 경찰과 검찰이 총력 수사 중인 상황에서 행안부가 감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토교통위 10월5일 국토교통부	심상정	공익사업이라면 개발이익 환수율이 높아야 하고 주택 공급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어야 하며,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도 대장동은 이 세가지가 모두 빠져 있다	노형욱 장관	현행 도시개발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인 경우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으나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들여다 보겠다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가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정무위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박수영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는 의혹만 갖고 조사를 하지 않고 구체적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있다 의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한테 먼저 주시면 검토해보겠다
행정안전위 10월 5일 경찰청	김형동	수사를 특검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느냐	김창룡 청장	자료량이 생각보다 많아 심층 분석이 필요했다 특검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제사법위 10월 5일 법무부	유상범	이재명 지사는 직원의 일탈이라며 관리자 책임만 이야기하는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이 지사에 대해 당연히 배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박범계 장관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거금이 동원된 로비 여부, 법조인 역할, 공영 개발 좌초 과정이 전반적인 의혹의 핵심이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누누이 강조하겠다
기획재정위 10월 6일 기획재정부	용혜인	국세청과 논의해 민간사업자 특별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국세청이 관찰하고 있을 것
정무위 10월 7일 금융감독원	윤주경	대장동 의혹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은행과 SK증권을 제대로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사당국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수사

위원회/ 일자/ 파김기관	질의 의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내용
				결과를 보가면서 필요한 회계 검사는 적극 검토할 것
법사위 10월 7일 감사원	유상범	바로 성남시청과 성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강민아 감사 원장 권한 대행	공익감사 청구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요건이나 이런 것을 살펴본 후에 감사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기획재정위 10월 8일 국세청	고용진	개발업자가 천문학적 돈을 벌고 뿌린 것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	김대지 국세 청장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검경 수사의 경과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무위 10월 12일 국민권익위	강민국	김만배씨는 8월까지 경제지 부국장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왜 안했는가 / 언론인 신분으로 3억원을 투자해서 몇 천억을 가져온 김 씨를 권익위에서 고발조치 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전현희 국민 권익 위원장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저희들은 법령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조사에 동의 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럴 경우에만 권익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가 되면 권익위가 직접 개입을 해서 조사해서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법에 미비 사항이 있는 것 같다

- ③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 의원석 손팻말’ 설치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하여 국정감사를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거나 귀한 국민의 시간을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데 허비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 다만 이로 인해 “국민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주지한 것은 바람직한 성과였다.
- ④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가 정작 중요한 주중국대사관이나 주일본 대사관은 동시에 영상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국에 반을 나눠서 현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후반전 기대

- 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게이트’ 든지 ‘이재명 게이트’ 든지 판교 대장동 개발의혹이 터진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그동안 진행된 개발사업에 대한 총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능한 빨리 특검을 도

입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화천대유 관련 이들의 범행을 도운 뒷배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조리 찾아내 단죄하여 대한민국에 국가정의를 살아 있음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 주어야 한다.

- ② 3·9 대선 관련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미 지나갔지만 선관위에 대한 종합감사를 철저히 하고, 대선과 지방선거로 국가의 리더십과 정부의 리더십을 모두 바꾸는 내년 선거의 해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한점 의혹이 없는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③ 코로나19 관련 정치방역 의혹을 불식시키고,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이들의 증언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여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약속 위반 코로나 백신 피해 실시간 증언》

■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아버지를 잃은 참고인 A 씨 : 부작용과 관련한 장기적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다수 피해자가 인과성이 없다고 정부가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는 B씨 : 인과성 인정이 안 된다는 A4용지 한 장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무슨 근거로 인과성이 없다고 하느냐,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 한 달 약값만 100만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심하다. 부작용을 책임진다면 정부는 '나 몰라라'한다

■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입원중인 C씨 : **정부만 믿고 백신을 맞았지만 어머니가 사지마비가 되고 중환자실에 갇혀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백신을 맞은 많은 사람들이 희귀병을 얻고 고통받고 있는데 인과성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대답으로 모두 얼버무리고 있다

■ 피해자 D씨 : 현재 인과성 심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유가족이 열람 자체를 할 수없는 상태다. 또한 정부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A4용지 한 장 짜리 똑같은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인과성 평가의 투명성을 위해 심의에 유족을 참여시키고 비공개인 평가과정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 피해자 E씨 : 지자체에선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했는데 사건이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보건복지위, 10. 7.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④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앙등으로 전세난민 등 피해가 극대화되고 있으므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⑤ 생활물가의 상승 등 민생 불안이 더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다.

(4) 형식적 특징 이번 국정감사는

- ① 개천절,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준비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전체 74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 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대선후보 경선으로 인한 관심분산 탓인지 예전보다 밤 11시가 넘는 심야 국감은 줄어들고 있어 국정감사에 대한 열의가 없어 보였으며,
- ③ 더욱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여야 감사위원간의 감정대립, 감사위원간의 끼워들기와 막말은 여전하였다.
- ④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불량 사례가 PPT 화면에 정리되어 나오기까지 하였다(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 공통 질의자료에 대한 회신이 국감을 하루 앞둔 9월 30일 밤에야 도착하였다는 성토도 있었다.

(PPT화면을 띄우고)

지금 오늘 국감을 시작하는 데에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께서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외교부가 국감을 위한 자료제출에 너무나 불성실하고,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몇 개 상임위를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만, 외교부같이 이렇게 불성실한 부처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실 상임위가 열리면 몇 차례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도 역시 전혀 그 태도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공관국감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해외공관 한국인 근무자 코로나 확진자수를 파악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의 숫자는 주는데 공관별로는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외 인종혐오범죄와 관련해서 외교부에 매뉴얼이 있나? 요구를 하니까 '재외공관영사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부 고위공무원 영향평가보고서를 요구하면서 개인식별자료는 다 가리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만 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급부터 9급까지 외교부의 무보직 대기발령자 리스트를 달라고 하니깐, 저희들이 1급부터 9급까지를 요구했는데 멋대로 1급부터 3급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못 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교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재외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재외공관별 공관장 외교활동현황 같은 이런 기본 자료조차도 '취합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로 아직도 제출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 번 봐 주십시오.

외교부에서 금년도 국정감사를 위해서 위원요구자료라는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을 국민의당 태영호 의원.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태규 의원 무소속. 이 도대체 외교부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완전히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 외교통일위의 10월 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의 의사진행발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자료제출 부실과 부실답변에 대해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이 산회 인사말을 통해 기관장에게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올해는 특히 일반 정책보다는 '화천대유'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확연히 눈에 띈다. 화천대유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사로, 정치권 유착으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자료 제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에게 “금융권이 자료 제출을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데, 시정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며 “금감원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제출이 어려운 자료를 빼고 몇몇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국세청의 경우, 화천대유 관련 과세정보나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원실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감장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았다.

2. 전반전에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

(1) 대장동 국정감사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회에서 라임·옵티머스사태가 크게 이슈화되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는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이 전 상임위원회 감사장을 휩쓸었다.

심지어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인체의 장기인 ‘대장’에 비유하면서 대장동 게이트 사이트를 성토했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대장동 사태가 등장한 국정감사장 일부》

위원회	대상기관	주요 질의 내용
법제사법	1일 대법원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는 자와 수차례 만나는 등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
	5일 법무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 수사의

위원회	대상기관	주요 질의 내용
		공정성 및 신속성에 대한 의혹 /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내부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
	7일 감사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실시 여부
	8일 지방검찰청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12일 공수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정무	1일 국무조정실 등	판교 대장동 관련 증인 신청 논란
	5일 공정거래위원회	화천대유의 개발지역 확보관련 단합이 있었는 지 여부
	6일 금융위원회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 조사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 공개
	7일 금융감독원	화천대유 금융조사 관련
기획재정	6일 기획재정부	대장동 개발 이익 배당금 관련 개발이익 환수법 처리
	8일 국세청 등	화천대유 차입금 이자금과 투자사인 킨애파트너스가 받았다는 이자율이 다르다며 세무조사의 필요성 화천대유 퇴직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 화천대유와 성남의 돌, 천화동인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는지
행정안전	1일 행정안전부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감사여부
	5일 경찰청	화천대유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문화체육관광	5일 문화재청	대장동 매장 문화재 및 의혹 및 그 해소를 위한 특검 또는 검찰 수사의 필요성
국토교통	5일 국토교통부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조사를 촉구
	7일 한국토지공사 등	LH공사가 대장동 공익개발을 포기하게 된 경우

(2) 플랫폼²⁾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플랫폼’ 기업 증인이 많이 나왔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네이버 한성숙 대표·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김범준 대표·쿠광 박대준 대표·야놀자 배보찬 대표·NHN 정우진 대표·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애플코리아 윤구 대표·페이스북코리아 정기현 대표 등 대표적인 플랫폼업계 대표들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하여 집중 질타를 받았다.

2) 플랫폼이란,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특정 프로세서 모델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체제를 말한다. 예를 들면, MS-DOS상에서 동작하는 DOS가 플랫폼이며, MS-Windows상에서 동작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MS-Windows가 플랫폼이다.[네이버 지식백과] 플랫폼 [platform]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5일 정무위원회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김범수 국감'이었다. 올 초 재산 절반 기부 결심을 발표하고, 지난 3월 글로벌 억만장자들의 기부 클럽인 '더기빙플레이지'에 220번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려 기부를 공식화했을 때의 밝은 표정과는 달리 그들이 질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김 의장에게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5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한 대표는 “직원들과 돌아가신 고인, 유가족에게 가장 먼저 사과드린다”며 “동료들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할 플랫폼 기업으로서도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쿠팡은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출하도록 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이 공격의 대상이 됐다.

숙박앱 야놀자도 과도한 광고비와 고객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사업 초기에 깊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광고 상품과 수수료 등 문제에 대해선 제휴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 개선하겠다”고 알렸다.

정우진 NHN 대표는 일부 직원이 대학원생을 사칭해 스타트업 기술을 베껴 유사한 서비스를 내놨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면서 “사업 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넷플릭스는 국감장에서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로 큰 성공을 거두고도 제작사에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 저작권 독점에 따른 불공정 수익 배분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팀장은 “창작자들과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3) 코로나 백신 국정감사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은 내국인 10%를 모집해야 한다는 임상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했는데 식약처는 이례적으로 3상을 승인해 다른 제약기업들로부터 특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처장은 “다른 의도를 갖고 서두르는 것은 전혀 없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국내 백신 개발이 다른 신약 개발보다 우선적으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0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침 기조를 따지는 질의가 많았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는 국민을 이해하고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해야 한다. 접종률을 자랑만 하면 되겠냐”라고 질타했고, 접종 후 사망 유가족과 이상반응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김미애·강기윤·백종헌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면서도 이상반응이 발생한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죽음보다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고 비판했다.

백종헌 의원도 “부작용의 두려움과 사망 시 국가가 나 몰라라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결정된 이상반응 사례는 3,425건 심의 중 1,793건에 불과했다.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21만건 대비 보상 결정은 0.66% 수준에 그쳤다.

김미애 의원도 “대통령이 책임진다 했으면, 부작용 인과성에도 같이 연결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백신 이상반응을 22건 인정했는데 정부는 2건에 그쳤다. 아나필락시스는 100% 수용했다. 경증은 인정하고 중증은 인정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정춘숙 의원은 “당사자가 되면 입장이 달라진다.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하는 일이 나오면 공감하게 된다”며 “인과성 보상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보상으로 봐야 한다. 의학적·과학적으로만 볼 문제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상반응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미애 의원은 “질병청에 8월부터 이상반응 평가 결과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질병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해 17개 시도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야당 의

원 무시하냐”고 질타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상반응 신고자료 부분은 개인 의무기록이나 개인 정보가 있다”고 곤란해하자 김 의원은 “정보를 가리고 내면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서정숙·이종성·강기윤·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 요청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회장 김두경 씨 등 접종 후 사망자의 유가족과 이상반응 피해자들 8명이 대거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3. 상임위 국감 활동과 이슈 《국회법 37조 순》

(1)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 화천대유와 전 대법관 그리고 고발사주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매일매일 국정감사 상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주었다. 법사위 핵심쟁점은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주심 대법관의 부절적인 행보가 논란이 되었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는 자와 수차례 만나는 등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각각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으로 1명의 대법관이 재판결과를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5일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내부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7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문제 지적, 대장동 개발 의혹,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감사위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하여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성, 감사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직무감사 등에 대하여 여러 지적을 하였다.

8일 전국 고등·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재판이 신속하게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법관의 권위적인 재판 진행(고압적인 말투·태도, 면박 등), 공정성 저하(증거 신청 과도한 제한·예단 등),

하위 법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같은 날 13개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노정환 지검장은 “검찰 수사심의 위원회 의견은 권고 수준으로 최종 의사 결정권은 검찰에게 있다”며 “검찰총장이 백 전 장관에 대해 수사지휘를 내린 만큼 이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고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기소 여부 시점에 대해서는 “지휘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관 탄핵심판 사건이 이슈가 되었고, 사건처리 지연, 장기미제사건 등으로 침해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지연보상법 제정, 국회에 대한 미제사건 보고 절차 마련 등 사건처리 신속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처음 실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2)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 대장동 게이트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의혹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기관, 권익위 등에 대해 5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국민의 관심사인 대장동 관련 증인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 여야의 쟁점이었다.

성남시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가 많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담긴 가계부채 대책을 비롯해 빅테크(Big Tech) 규제 방안, 암호화폐 업권법 논의 등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화천대유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등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금융당국 국감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주목받았다. 여야 모두 1,800조원을 넘어서며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대책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가계대출 한파를 초래한 금융당국의 총량규제에 대해선 반론이 쏟아졌다. 여야는 금융당국이 10월 중순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한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과 SK증권 등에 대한 검사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도 받았다.

먹튀 논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의 수용률 상향과 은행 간 편차 축소,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하향 조치, 광주은행 채용 비리 후속 조치 점검 등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권익위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인 출신 대표의 김영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촉구가 있었다.

(3)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 가상자산 과세,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공과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5일부터 4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첫날부터 대장동 손팻말 논란으로 파행하다가 오후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매일매일 하루치 국감내용을 국민들에게 정리·공개하였다.

기획재정부 1일차 국감에서는 국가재정 규모 및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이번 정부 기간 동안 약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2022년 예산안 기준 1,0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증가한 국가채무의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불용예산·여유자금 관리 강화 및 예산의 제로베이스 편성 방안의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와 ‘세수추계 정확성’에 대한 집중 점검, 가상자산 과세여건의 미흡 등을 고려한 과세유예 필요성 및 과세체계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등 세

수추계 정확성 문제 개선 필요, 세법 개정안의 조세지출 효과가 대기업 및 수도권 등 특정대상에 집중될 우려, 부동산 관련 세제의 지나친 복잡성 문제 등 개선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철저한 세무조사 및 자금추적 필요성,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제도 도입 재검토 필요성, 「국세기본법」상 관련 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한 지적 및 질타가 있었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청이 공표 전 청와대에 사전 제공한 통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청 통계의 신뢰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세관 직원이 지인들에게 암호화폐(코인) 채굴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약 7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난맥상 점검

교육위원회는 4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기관 그리고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였다. 첫날부터 파행이 이루어져서 오후에 국감이 진행되었다.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초중등 분야는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해소, 교육회복지원, 학력격차 및 기초학력 보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립, 초중고교 원격수업, 초등돌봄교실, 미인가 대안학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2022 교육과정 개정 등이 쟁점이 되었고, 2학기 전면등교와 학교방역 실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등 코로나 현안도 작년에 이어 집중 논의되어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교육격차 심화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교육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조국 교수의 딸 조민 관련된 질의도 나왔으며,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부인 논문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5일 동북아 역사재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시정, 사학연금재단 제정, 교원처벌문제 등이 주로 질의 되었다.

7일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고, 윤석열 전 대검찰청장 부인의 고등학교 교사 이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전패해 소송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제기되었다. 학부모 반대에 부딪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코로나19속 학력격차 해소 방안 등도 조명되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 대한 교육감협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지난 6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도와달라는 쪽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타도 있었다.

12일 2일차 지방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현장학습도중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과 대책이 많이 조명되었다.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 플랫폼,탈원전,방송 공정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BS 등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영상 국감으로 이루어졌다.

구글 갑질 방지법 등 주로 플랫폼 기업관련 증인신문이 많이 보도되었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월성 원전 부지의 방사성 물질 유출 조사와 관련된 여야 의원과 피감기관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질의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했다. 월성 원전 1호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문제 삼는 주장도 나왔고,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조사와 관련해 한수원이 현장 검증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 재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8일 KBS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와 여권 편파보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 KBS는 기존 2500원이었던 수신료를 52%나 인상해 38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해 국민의 공분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조차도 양승동 사장의 임기 만료 시기이고 여건이 안 좋은 시기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6)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 : 종전선언 논란

외교통일위원회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국외출장으로 외교부 소관 국정감사만 진행하였다.

6일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외교통일위의 주일한국대사관 국감에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과 관련, “한일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우리 정부는 신내각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의미를 적극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없는 종전선언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7)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 국방부 국정감사 무산, 비핵화 진전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간 국정감사가 계획되었으나 3일 실시하였다. 대부분 현지에서 하였고 때문에 모니터링에 제한이 있었으며, 첫날 국방부 국정감사가 무산되었다.

현지에서 10월 6일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무산됐던 국방위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원인철 합참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감시·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차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 6명이 불참했다. 개인 일정, 당사정 등의 이유로 국방위 위원 6명은 2년 만의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불참한 의원은 한기호, 성일종,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3명과 윤호중, 김진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다. 2작사 국감 시각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대진표가 발표됐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드론 공격 대비 태세 미흡과 장비 노후화 문제 등을 일제히 지적했다. 북한과 테러단체 등에 의한 드론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제2작전사령부의 드론 대비 태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사청 국정감사에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우리 측에 미납해온 사업비 분담금 문제가 다음 달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야당은 7041억원에 이르는 미납액을 두고 ‘버티기’로 일관해온 인도네시아 당국과 우리 정부의 저자세 협상 태도를 지적했다.

(8)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 대장동 게이트와 공정선거관리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피감기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증인채택에 있어서 여야간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 의혹을 5개월간 내사(입건 전 조사)만 진행했다며, 이 기간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피의자로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았다는 수사지연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화천대유 의혹에는 여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돼 이목이 집중됐지만 수사 전환 후에도 경찰의 소환조사 등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이 이달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잇달아 진행하자 경찰이 그제서야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8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고문을 맡는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도의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화천대유가 취업 심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걸림돌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서범수 의원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빠져나간다. 정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만 법에 걸렸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자꾸 빠져나간다”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달라”고 답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때 심리에 관여했다. 그는 이 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해 무죄 의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선고가 이뤄지기 전 5차례 권 전 대법관이 있는 곳을 방문해 대장동 인허권자인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아 사실상 '재판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우편투표에 집중됐다.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 플랫폼, 이견희, 심석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하루는 시찰을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국감 후에는 이견희 컬렉션 관람을 하였다가 언론으로부터 특혜 관람과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1일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배현진 의원이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의향서 관련 질의를 하였고, 김승수 의원은 북한작가의 그림을 전시한 광주비엔나레의 문제점을 질타하였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2017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자, 당시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에 속했던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하며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증인신문을 통해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업 헬스업 등의 피해 상태를 조명하였다. 참고인으로 선 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은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간다. 30%라고 가정했을 때 남은 700만원은 메인작가와 제작사가 다시 나누는데, 메인 작가는 글작가, 보조작가와 또 나뉘야 해서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작가들이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날 ‘건강한 웹툰 창작 생태계를 위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들은 플랫폼이 콘텐츠 생태계를 키우고 있는 시점에서, ‘생존’을 위해 수수료 부과는 부득이하다고 항변했다.

실제 ‘편의성’을 내세워 일상에 자리 잡은 플랫폼을 무작정 내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주요 수익모델인 플랫폼 기업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12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의 심석희-최민정의 고의 충돌 의혹과 학교 폭력 논란 이후 해외 진출을 추진한 여자배구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논란 등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발농작물과 해양쓰레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순조롭지 않았지만 국정감사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자료 형식으로 알리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오전에 파행을 하다가 오후에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쌀수급 균형문제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였다.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해상풍력·수산공익직불제·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수산업·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여야위원들은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재활용을 강화하고,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 등에 대해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청취를 강화하며, 어업인·인근주민 등이 만족할 수 있으면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8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농촌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야 할 농촌진흥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농촌진흥청의 성과 미흡, 연구 부실 등에 대해 질타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불법 농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농촌진흥청이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현상으로 발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한 상황인데 관련 성과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진청의 직장 내 갑질, 폭행 문제를 비롯해 내부평가 허술도 도마 위에 올랐다.

10월 12일(화)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산림·임업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태양광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지, 산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내 탄소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산림 탄소 흡수량이 감소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기상이변 등으로 증가하는 산사태, 산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에너지전환과 상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5일부터 3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쟁점이었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 내지 골목상권의 상생협력방안이 핵심사안이었다. 그 외 한전의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늘었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외에 미국의 반도체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 대응 주문, 박기영 산업부 2차관(에너지차관)의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제기 등도 도마에 올랐다.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권명호 의원은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2020년 130조4,700억원에서 2025년 164조4,797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자체 전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탄소중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에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산업부의 업무 현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감 시작 전에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신경전을 벌였다.

7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논란의 조성은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7천만원,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1억원 등 연체 이자까지 2억4350만원의 빚이 있는데 875만원만 추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질의하자 장관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12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감에서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 문제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원가 상승분이 반영

된 인상이라고 하였다. 또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질책도 있
따랐다.

국감에서는 지난 6월 취임한 정승일 한전 사장을 비롯해 올해 새로 취임한 에
너지 공기업 수장들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낙하산·보은인사'에 대해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12)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위드 코로나와 백신 부작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감은 피감기관장이 10월
5일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는 국민의힘의 항의로 초반에 여야의 신경전
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 내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 후 부작
용·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의견
이 다수 제기되었다.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과
객관적·독립적 심사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
한 고강도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단
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연계한 재택치료 시스
템의 준비, 접종완료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으며, 백신패스 도입 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
기되었다. 또한 코로나 치료제 구매를 위한 적정예산의 확보와 국내 백신개발 역
량 강화를 대책 마련 등도 주문되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일상회복 시점을 질문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말이면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땔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순화하고, 지킬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쪽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 후의 부작
용·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의견
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방역수칙 준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10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
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대비 실익이 적다는 우려, 여성 하혈을 코로나19 백

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코로나19 경구형 치료제 신속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00제약의 말라리아치료제 '피라맥스'를 처방받거나 임의로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3)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 광상도와 인국공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환경부 국정감사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하였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회환경노동위원회도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는 작업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실효성 여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사업장 내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관련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시작과 함께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본격적인 질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화천대유 '로또 퇴직금'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조사 요구로 후끈 달아올랐다. 증인대에 선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직원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며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의원들의 질책은 빗발쳤다. 광주 붕괴참사 등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정부의 대책이 무위에 그쳤기에 노동자가 허망하게 숨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뼈아픈 질타였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는 앞서 광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 중 43억7천만원이 산재 위로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가 최근 5년간 관할 노동청에 산재를 보고한 기록은 없었다.

안 장관은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이어 '화천대유의 행동이 산재 은폐가 맞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성남지청에서 산재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의 아마추어 일자리 정책으로 ‘참참참’이다. 국민들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담하다는 뜻”이라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9월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하셨다. 국민이 보기에 문 대통령은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비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에서의 낙하산 인사와 갑질 논란도 제기되었다.

8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예보 정확도 문제와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낮은 활용률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감 당일마저 강수 예보가 빗나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당 500억~600억원대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5~6년마다 버려지는 사실도 지적을 받았다. 예보 용어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감장에서는 인사 문제도 거론됐다. 최근 취임한 안영인 기상산업기술원장이 최종 후보 3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도 더불어민주당 캠프 관계자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발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한승) 대장동 게이트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첫날 파행을 하였고, 대장동 게이트로 인해 여야간 입장차가 컸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여야 간 고성이가 오가기도 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등 교통물류 분야 ‘빅테크 갑질’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 자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는 전체 매출의 3.3% 수수료를 떼어가고 비가맹택시에는 월 3만9000원짜리 프로멤버십을 권유한다”며 “특히 프로멤버십 가입을 위해 비가맹택시엔 전체 호출 콜수를 줄어둘게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감장에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하심위)의 밀실운영을 지적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는 물론 도로공사 부지관리, 새로 도입한 자동차 번호판의 문제점 등이 핵심이슈로 제기됐다. 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도 이슈가 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제 업무는 달라지지 않은 직원들의 고용비용으로 46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도로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업무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4.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진행 발언, 기자회견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의 10월 12일 국민권익위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여러 차례 야당 간사에게 요청했지만, 아직도 확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김희곤 의원은 “애초 증인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건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 40여 명을 (여당이) 한 명도 안 받아준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하고 행안위·국토위 증인을 회피할 수 있으니 오늘 권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현승)의 10월 12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반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설계한 사업”이라며 “지주들에게 손해를 엄청 입히고, 지인들에게 돈벼락 안긴 설계자가 이재명 후보”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반드시 국감 출석해야 한다”며 “이 후보 국감장 나와서 혹시나 허위나 위증할 경우 대비해 그게 두렵고 피하고 싶겠지만, 온 국민 관심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후보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성민 의원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설만 가지고 게이트라고 표현 하느냐”며 “상대당 정식 후보가 된 사람에게 게이트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맞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이재명 지사가 국감 돌파하겠다는 의지 내비쳐서 이대로 사퇴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일반 증인으로 요청하는 걸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평택 현덕, 포천, 구리처럼 제2대장동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상을 아는 경기도 이용철 행정1부지사가 국감 직전에 교체됐

고, 대장동 사태에 대한 고의적인 증언 회피로 보일 수 있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이용철 부지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LH 사장, 신영수 국회의원과 신영수 의원의 동생 신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의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동 중인 원전 13기의 부설시공 등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연구원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KINS 연구원이 월성원전 SFV 차수벽 시공 과정에서 차수막이 파괴돼 방사성물질이 유출됐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월성원전은 그간 매년 700~14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안전성마저 담보되지 않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증인 채택을 끝까지 반대해 결국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이원영 의원 말씀에 그냥 넘어가면 국민의 오해가 있을 것 같다”며 “원전을 괴물인 양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오히려 야당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을 드러내 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증인 신청했는데 여당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며 “오는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반드시 최 전 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여당은 대장동 게이트가 우리 야당이 연루된 게이트라고 주장해 왔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밝히면 될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원천 봉쇄한 여당은 과연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은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며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포함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6일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51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협의를 피하며 대장동 관련 증인·참고인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 등은 제외하고 정쟁을 최소화해 지역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인·참고인만이라도 불러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서자고 요청했으나, 여당은 이 같은 제안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요청한 약 100건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경기도는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여기에 증인 채택까지 거부해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 중요한 권한인 국정감사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증인과 참고인 인사들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사례**

- 정무위 : 김정주 넥슨 창업주 / 해외투자 등을 위해 출국한 상태 - 증인 철회
- 정무위 :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 건강상 이유 - 증인철회
- 보건복지위 : 조영식 SD 바이오센서 대표 / 증인신청 철회
- 행정안전위 : 정대택 / 증인신청 철회

5. 국회사무처의 가이드라인

국회사무처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 관련 방역 지침으로 50·50·50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내려 보냈다.

국정감사에 임박해 코로나 방역지침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방역지침으로 코로나19가 예방될 수 있는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위기나 재난시 국정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거기에는 합리적으로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아 지금처럼 백화점식 감사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II. 2021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1. 2021년 국정감사의 행태적 특징

(1) 손팻말 관련 파행

국정감사장의 손팻말과 관련하여 여야간의 날카로운 대립으로 국정감사가 파행되거나 지연되었고, 심지어는 무산까지 되었다.

《팻말 관련 2021년도 국정감사 파행일지》

일자	위원회(위원장)	피감기관	이유	결과
10월 1일(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손팻말 논란으로 정회	가장 먼저 회복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옥)	국무조정실 등	손팻말 논란으로 정회	오후에 감사
	교육위 (위원장 조해진)	교육부등	손팻말 논란으로 정회	오후에 감사
	과방위 (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손팻말 논란으로 감사시작 못함	오후에 감사시작
	외교통일위 (위원장 이광재)	외교부	손팻말 논란으로 18분만 정회	오후 감사하다가 5시 47분 중지
	행정안전위 (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부	손팻말 논란으로 감사시작 11분에 정회	오후에 감사시작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손팻말 논란으로 11시 12분 경에 정회	잠시 정회하다가 국민의힘만 들어와서 2시 예고
10월 5일(화)	기획재정위 (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부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개최도 못한 채 파행	오후에 감사시작
	과방위 (위원장 이원욱)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생략건으로 간사에게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정회	46분 만에 정상화
	국방위 (위원장 민홍철)	국방부	오전 10시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국감장 좌석 앞에 국민의힘이 설치한 대장동 관련 피켓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해 시작못함	국감이 무산됨

일자	위원회(위원장)	피감기관	이유	결과
	행정안전위 (위원장 서영교)	경찰청	손팻말 논란으로 늦게 시작	정상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김태흠)	농림축산식품부	손팻말 논란으로 국감 시작 못함	오후에 개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이헌승)	산업통상자원부	지연시작 여당은 '윤석열(父) 집. 광상도(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준비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해 피켓을 내리기로 하고 나서야 국감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헌승)	국토교통부	대장동 피켓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며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좌석에 대장동 특검 피켓을 내걸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항의에 나서며 양측 간에 거친 설전이 오갔다.	가다 서다를 반복함
10월8일(금)	보건복지위 (위원장 김민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의힘에서 근조 리본과 정치적 구호가 쓰인 마스크를 쓰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들의 항의로 감사 지연	지연 개의

손 팻말이 아닌 원인으로 국정감사가 중단된 경우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가 유일하였다.

일자	위원회(위원장)	피감기관	이유	결과
10월 5일(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간의 막말	20분 정도 정회
10월 8일(금)	행정안전위(위원장 서영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 후 이석관련	이석하기로 결정

(2)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 부실국감

2021년도 감사에서는 위원회별 하루에 감사하는 피감기관수가 평균 5.1개였다.

하루 평균 피감기관 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하루 평균 9.14개와 9.11개였다. 지난해와 비슷하였다. 다음으로 법

제사법위원회로 7. 8개 기관이었고, 환경노동위원회는 7.50개였다.

하루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감사가 이루어진 일수는 무려 25일(2020년도 21회, 2019년도 30회)나 되어, ‘흠어져야 산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무색케 하였다.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감사 일수를 살펴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국방위원회**가 3일 순이었다.

《2021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과 10개 이상 동시수감 기관 현황》

구분	감사일정	대상기관	시찰	10개이상 동시수감일정	1일평균 감사기관
운 영	2	9	0	0	4.50
법 제 사 법	10	78	0	3	7.80
정 무	10	47	0	1	4.70
기 획 재 정	9	29	0	0	3.22
교 육	7	64	0	3	9.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9	82	0	2	9.11
외 교 통 일	10	31	0	0	3.10
국 방	10	67	4	2	6.70
행 정 안 전	10	33	0	1	3.30
문 화 체 육 관 광	8	51	1	3	6.3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0	36	0	0	3.6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8	58	0	4	7.25
보 건 복 지	8	41	0	0	5.13
환 경 노 동	10	75	1	5	7.50
국 토 교 통	9	33	1	1	3.67
정 보	4	5	1	0	1.25
여 성 가 족	1	6	0	0	6.00
계	135	745	8	25	5.52

《2020년도 피감기관수 현황과 10개 이상 동시 수감한 피감기관 현황》

위원회	대상기관	감사일수	시찰제외	1일평균 감사대상수	10개이상대상 기관감사일수
운 영	9	2	2	4.5	0
법 제 사 법	76	11	11	6.9	4

위원회	대상기관	감사일수	시찰제외	1일평균 감사대상수	10개이상대상 기관감사일수
정 무	46	10	10	4.6	1
기 획 재 정	29	9	9	3.2	0
교 육	64	7	7	9.1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82	9	9	9.1	2
외 교 통 일	30	9	8	3.8	0
국 방	63	10	8	7.9	3
행 정 안 전	35	10	10	3.5	0
문 화 체 육 관 광	56	8	7	8.0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37	10	10	3.7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44	8	8	5.5	2
보 건 복 지	22	8	8	2.8	0
환 경 노 동	70	10	9	7.8	5
국 토 교 통	31	10	9	3.4	0
정 보	5	4	3	1.7	0
여 성 가 족	6	2	1	6.0	0
계	705	137	129	5.5	21

(3) 심야국감은 겨우 4번, 열의를 가진 국감진행 안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밤 11시를 넘어서까지 열의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첫날 2개 위원회만 밤 11시 넘어 까지 감사를 했는데, 올해 2021년도 국정감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일하였고, 오전 파행으로 인한 것이었다.

10월 5일 12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 3개 위원회만 밤 11시를 넘겼다. 감사일정도 줄어들고 감사 시간도 대폭 줄어들었다.

《밤 11시 넘은 2021년도 심야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시작	끝
10월 1일(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국회	14:04	24:00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시작	끝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10월 5일(화)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회	14:05	23:5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회	10:07	23:58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0:36	24:12

《밤 11시 넘은 2020년도 심야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시작	끝
10월 7일	외교통일위	외교부	국회	10:04	23:25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0:14	24:00:00
10월 8일	기획재정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회	10:02	23:3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회	10:05	23:41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한국전력 등	국회	10:03	23:40

(4) 조기 종료 국감은 7개로 도로 늘어

올해는 6시 이전에 조기종료한 국정감사는 확인을 못한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10월 1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의 외교부 국정감사가 5시 46분에 감사중지된 것을 시작으로 10월 6일 위원회의 주중국대사관과 주일본대사관의 화상 국정감사가 13시 53분에 종료되었다.

10월 7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가 이견희 컬렉션 관람을 위해서 17시 26분경에 종료하였다.

10월 8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의 정보통신산업진흥

원 등 화상 국정감사가 16시 39분에 종료하였고,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도 16시 55분에 종료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의 농촌진흥청 등 국정감사도 17시 03분에 끝났다.

10월 8일 국방위(위원장 민홍철)의 제2작전사 국정감사는 오전 12시 16분에 끝나고, 현장점검을 하였다.

10월 12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의 산림청 국정감사가 17시 43분경에 종료하였다.

참고로 지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0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청 국정감사가 11시가 넘어 시작해서 5시 30분에 마무리 되었으며, 그 외에는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가 17시 19분에 끝난 것이 전부였다.

(5)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다시 시작

이번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10월 6일 주중대사관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동시화상 국감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미주반과 구주A반, 구주B으로 나누어서 10월 9일부터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6) 박용진, 하태경, 홍준표 대선경선 후보의 국정감사 불출석

국회공보를 통해 확인한 바, 이번 국정감사 전반전에서 감사위원 중 국정감사 전반전 전 과정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의원은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정무위)와 하태경(국방위원회), 홍준표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었다.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고 있는 의원은 곽상도 의원(교육위), 윤상현 의원(문화체육관광위) 그리고 정찬민 의원(교육위원회)과 이상직 의원(국방위원회)이었다.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의원들은 청가로 국정감사에 불참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장관인 전해철(기획재정위원회), 환경부장관인 한정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권칠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다.

출장으로 불참한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최춘식 의원이다.

10월 8일 국방위의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선 감사위원 6명이 결석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10월 6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촉구결의안이 제출한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감사를 계속하고 있다.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국정감사 중인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여 좌석이 변경되었다.

(7) 국정감사에서 졸다가 지적당한 피감기관장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도중 졸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의원들로부터 못매를 맞았다.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실시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오가는 도중 박 위원장이 보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환노위 위원장은 박 위원장을 호명하며 “계속 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꾸벅꾸벅 줄고 있다”며 “3일 연휴 열심히 일을 하신 거냐, 아니면 너무 많이 노셔서 그런 거냐 오전 내내 졸고 있단 지적을 받았는데도 오후에도 계속 그런다”고 지적했다.

2. 2021년도에도 여전한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

(1) 지역구 관련 질의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구 현안이나 민원을 국정감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에 많이 하는데 올해에도 여전하였다. 지역민원을 외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는 국정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민원의 경우에는 서면질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감기관 제출자료로 시간 때우기 (노력한 결과물이 없음)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라는 말이 많고, 그 통계에 의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은 감사원 등이 지적인 것을 내세우고 있다.

(3)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버티기

올해에도 국감 시작을 하면 자료요구를 하는 데, 자료 안주기, 버티기가 더 심해진 듯하다.

(4) 역대급 자리 안 지키기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정감사 질의 중에만 자리를 지키거나, 여야간의 언쟁이 있는 경우에만 자리를 지키는 등 영상을 통해 텅빈 국정감사장의 간혹 비쳐지기도 하고 있다.

3.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캄캄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는 국회의원 현황에 국회의원의 프로필 연락처 보좌진 이메일 주소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공란이거나, 소개되어 있어도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홈페이지(SNS 포함)를 볼 수 없는 경우가 감사위원 대비 23.73%나 되었다. 소개된 경우는 295명 중 225명으로 76.27%였다.

10명중에 3명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7개월이 지나가는 지금도 국회의원 현황에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주소를 소개하고 있지 않았다.

홈페이지 소개율이 가장 저조한 상임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로 소속위원 16명 중 7명밖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 홈페이지 소개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43.75%였다.

가장 양호한 상임위원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으로 소개율이 57.89%였고, 그 다음 국회 교육위원회로 16명중 10명이 소개를 하고 있어서 62.50%였다. 가장 소개율이 좋은 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로 소속위원 16명 중 15명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소개하고 있어 93.75%의 홈페이지 소개율을 보여 주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개인 주소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개인제작 홈페이지 등 다양했는데 이중 네이버 블로그를 소개한 의원이 185명으로 225명 중 82.22%를 차지하였다. 네이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직장에서의 갑질로 자살사고 발생한 곳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이 NAVER 등 포털 인물소개에
서는 검색이 되는 데도 국회 홈페이지에는 안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

《2021년도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 홈페이지 주소 소개 현황》

조사일 10월 9일(토)~10일(일)

조사대상 : 국회홈페이지 의원활동(국회의원 현황)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홈페이지(SNS포함) 소개 의원수	홈페이지소개율
법제사법	18	16	88.89%
정무	24	17	70.83%
기획재정	25	20	80.00%
교육	16	10	62.5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5	75.00%
외교통일	20	16	80.00%
국방	17	12	70.59%
행정안전	22	18	81.82%
문화체육관광	16	12	75.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11	57.8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9	20	68.97%
보건복지	24	21	87.50%
환경노동	16	15	93.75%
국토교통	29	22	75.86%
계	295	225	76.27%

《2020년도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 홈페이지 주소 소개 현황》

조사일 10월 12일(월)~13일(화) 일과시간

조사대상 : 국회홈페이지 의원활동(국회의원 현황)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홈페이지(SNS포함) 소개 의원수	홈페이지소개율
법제사법	18	12	66.67%
정무	24	15	62.50%
기획재정	26	19	73.08%
교육	16	7	43.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4	70.00%
외교통일	21	13	61.90%
국방	17	10	58.82%
행정안전	22	13	59.09%
문화체육관광	16	11	68.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10	52.63%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홈페이지(SNS포함) 소개 의원수	홈페이지소개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0	20	66.67%
보건복지	24	21	87.50%
환경노동	16	10	62.50%
국토교통	30	19	63.33%
계	299	194	64.88%

국회의원의 2021년도 국정감사 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95명 중 141명이 국정감사자료를 게시하고 있어 국정감사자료 게시율이 47.80%였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의원이 감사시간에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동영상이 많았다. 통계에서는 단순 기사나 사진을 제외하고 피감기관 별로 보도자료나 질의 영상 또는 질의 요약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해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만 통계에 포함하였다. 홈페이지가 소개되어 있으나 연결되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는 17명의 의원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2021년도 국감활동 게시율 》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법제사법	18	6	33.33%
정무	24	15	62.50%
기획재정	25	9	36.00%
교육	16	8	5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8	40.00%
외교통일	20	8	40.00%
국방	17	4	23.53%
행정안전	22	13	59.09%
문화체육관광	16	9	56.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5	26.3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9	13	44.83%
보건복지	24	17	70.83%
환경노동	16	10	62.50%
국토교통	29	16	55.17%
계	295	141	47.80%

《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2020년도 국감활동 게시율 》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법제사법	18	8	44.44%
정무	24	12	50.00%
기획재정	26	10	38.46%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교육	16	7	43.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0	50.00%
외교통일	21	8	38.10%
국방	17	6	35.29%
행정안전	22	11	50.00%
문화체육관광	16	7	43.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4	21.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0	13	43.33%
보건복지	24	16	66.67%
환경노동	16	8	50.00%
국토교통	30	16	53.33%
계	299	136	45.48%

4.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열전

(1)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지난 6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한 광주 학동 건물붕괴사고와 관련해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10월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이어, 두번째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 권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공사는 무리한 철거 방식, 불법 재하도급 등이 낳은 인재로 밝혀졌다. 사조위는 HDC현산이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권 대표를 비롯한 HDC현산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대표는 “불미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 부상당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해 일상이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권 대표는 “철거현장 6곳을 중단하고 외부 전문가에 점검을 의뢰했고, 불법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하도급이 일어나는 부분을 막고자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했다.

(2)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불매운동이나 '남양스럽다'는 비아냥 등에도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 매각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 회장은 의원 질의에 연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와 “부끄럽다” “아니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의원들이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은 “잘 보이지 않는다”했고, 질의에 대해서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느냐?”며 “참 답답하네”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런 홍 회장이 힘주어 또렷하게 답변했던 것은 매각 관련 질의가 나올 때마다였다. 매각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의에 홍 회장은 “지금 일(매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은 사전에 상대방(한앤코)과 여러 가지를 합의 했으나 이행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3)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기관증인인 박기영 2차관이 과거 민간기업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차관이 지난 2015년 2월 4일 SK E&S 관계자들과 강남의 한 전통 요정을 방문해 350만원 가량의 식사 대접과 상품권 1장 등 총 4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식당은) 1인당 식사비가 46만~50만원이고, 접객원들과 ‘2차’가 가능했던 요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차관이 당시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이었고, SK E&S가 위례 열병합사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 11월 14일 오전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용량 증설 반대 청원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같은 날 오후 산업부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승인했다며 “(박 차관이) SK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을 비롯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유정주 SK E&S 대표, 이완재 SKC 사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 차관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달리 특별한 경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업무적인 이야기는 안하고 통상적인 지역난방 사업들, 업계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4) 김범수 카카오 의장

2021년 국회 국정감사는 ‘카카오’ 국감이라고 불리고 있다. 김범수 의장이 직접

출석한 상임위원회만 정무위원회, 산자중기위까지 2개. 카카오 계열사 대표가 참석한 상임위까지 합치면 5개가 넘었다. 김 의장이 “저 자신도 모르게, 또 카카오의 공동체 CEO들도 성장에 취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카카오가 지향해 나갈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신속하게 일정, 계획, 실천방안, 상생 이야기를 공개해서 말씀드리겠다.” 고 카카오의 ‘쇄신’을 약속한 만큼 골목상권을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사업은 빠른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5) 배보찬 야놀자 대표

숙박·여행 플랫폼 업체 야놀자가 과도한 사업 확장과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 논란 등과 관련해 정무위원회의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못매를 맞았다. 과방위 출석을 위해서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장에서 이석을 허가하기도 하였다. 물론 증인신문을 다 마친 뒤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주를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배 대표는 “계약서상 광고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최근 쿠폰과 연관된 광고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 제휴점주의 의견을 듣고 상품 구성에 반영하고, 시장 가격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야놀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업자들이 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주지만, 여러 가지 불공정한 이슈도 만들어내고 있다”며 “공정거래 입장에서 균형감 있게 살피면서 불공정한 이슈는 엄정하게 제지하겠다”고 했다.

5. 2021년도 국정감사에 나타난 낙하산 내지 캠퍼더 인사 논란

국정감사장에서는 캠퍼더 내지 낙하산 인사가 많이 거론되었는데, 그중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1) 안영인 기상산업기술원장

최근 취임한 안영인 기상산업기술원장이 최종 후보 3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도 더불어민주당 캠프 관계자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발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안 원장은 1, 2위 후보와 7~8점 이상 점수 차이가 났는데 이것도 민주당 캠프 관련 심사위원이 점수를 후하게 준 결과”라며 “점수가 앞선 1, 2순위 대신 3순위를 원장으로 뽑은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안 원장의 배우자가 현재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으로 재직 중이라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과학국장이 상급단체인 기상청에 근무하고 있는 마당에 3순위 후보가 기상산업기술원장으로 임명됐다”며 “이렇게 되면 부부가 같은 일을 하게 되니 이해충돌방지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기상산업기술원장은 후보의 역량이나 기술원의 필요 상황 등을 감안해 임명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2) 황현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 (자진사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펀드운용 무경험자인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선임돼 낙하산 논란을 빚다가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임명 여부에 대해 몰랐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황씨의 본부장 임명 시도에 대해 알았느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성장금융은 민간회사로 사전에 알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도 유 의원이 ‘시중에선 황씨가 (임명 논란이 일자) 도 부위원장에게 부담이 되니 사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묻자 “(임명 여부를)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관련 경력이 전무한 황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을 책임지는 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으로 내정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황 전 행정관은 결국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된 바 있다.

(3)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277명 중 29명이 낙하산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의 임원 10명 1명 꼴로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임원 자료(지난 5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임명직 임직원 277명중 29명이 ‘캠코더’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이는 9명에 그쳤던 지난 2018년 수치(바른미래당 조사)에 비하면 3년간 약 3배가 늘어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희은 비상임이사(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국가지식재산특위위원을 지냈다.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 출신인 최태림 이팔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난 4월부터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비상임감사를 맡고 있고,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 애널리스트 위원장을 맡았던 조병문 타이거 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은 우체국 금융개발원 비상임이사로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선임행정관을 맡았고 지난 총선 서울 도봉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강정구 전 선임행정관은 우체국 물류지원단 상임 감사를 맡고 있다.

(4) 교육부 산하·유관기관장 42%가 '캠코더 인사'

교육부 산하·유관기관장의 42%가 이른바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 산하·유관기관의 임명직 인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33곳 중 42%인 14곳의 기관장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국립대법인과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산하기관은 26곳 중 11곳(42%)의 기관장이 캠코더 의혹 인사로 분류됐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유관기관도 7곳 중 3곳(43%)이 캠코더 의혹 인사가 기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산하기관장 중에서는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박 원장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을 지냈다. 유관기관장 중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을 지냈다. 기관장만이 아니다. 국립대병원은 14곳 중 9곳(64%)의 상임감사를 캠코더 인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임명된 송세연 강원대병원 상임감사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창업한 출판사 돌베개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50세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도 2002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대덕구청장 후보에 출마한 뒤 지난 18대 대선에선 문재인 후

보 대전 유세단장으로 활약했다.

(5) 금융계 임원 138명 중 32%가 캠퍼더 인사

금융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난 연말까지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한 금융계 임원 138명 중 32%가 '캠퍼더 인사'로 채워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금융 공기업은 47%, 은행권은 19%에 달한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두셨다던 '일자리 상황관'은 사실 '낙하산 상황관'이었던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캠퍼더 낙하산' 리스트도 일일이 지목했다

(6) 발전공기업 출자 SPC에 한국전력그룹사 퇴직자들 대거 임직원 재취업

발전공기업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에 한국전력그룹사 출신 퇴직자들이 대거 임직원으로 재취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출자한 발전공기업 출신이었다.

10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서부발전 등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5사가 출자한 SPC에 재직 중인 한국전력그룹사 출신 퇴직자는 59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26명은 대표이사로 재취업했으며 나머지 인원도 대부분 발전소장, 본부장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중 51명은 발전공기업 출신 퇴직자였다. 발전공기업들은 그간 재생에너지, 전력서비스 등 분야의 사업 확장과 시장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SPC 등을 적극 도입하면서 경영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것임을 공언해왔다. 하지만 발전공기업 출자 SPC재직자 중 전력그룹사 퇴직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공언은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공기업이 현직자 파견은 물론, SPC 소속 임직원까지 자사 퇴직자로 채워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 비정규직 없애려 만든 공기업에 '親정부 낙하산' 15명"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신설된 공기업 자회사에 낙하산 인사들이 임원으로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출범 직후부터 주요 정책 기조로 내걸고 추진해온 사항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23개 공기업 임원을 분석한 결과 총 51명의 상근 임원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친정부 정치 관계자로 분류되는 인사가 13개 회사에서 15명에 달했고 모회사 공기업에서 내려온 임원은 33명이었다. 공모로 채용된 외부인사는 3명에 그쳤다. 추 의원이 '정치권 낙하산'으로 분류한 인물 중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실장 출신 △문재인 대선 후보의 정부특보단장 출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 행정관 출신 인사를 비롯해 다수의 민주당 전·현직 지역위원장들이 포함됐다.

(8) 주요 20개 경제부처·기관의 관료 250명이 금융권 재취업

10월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20개 경제부처·기관 근무자 250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51명(25.6%)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5개 경제부처·기관 취업자는 124명이며, 이 가운데 기재부 출신은 43명에 달했다. 금융권별로는 저축은행(72명), 1금융권(70명), 보험사(53명), 증권사(52명), 카드사(3명)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았다.

6.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협회 등 유관기관의 비리 등 문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유관기관이나 퇴직자모임 등에 대한 지원 등과 독점 거래 등이 많이 거론되었는데, 언론에 나온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다.

(1)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전자담배 업계가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정부가 연초기금을 부과하는 궤련담배는 연초는 살리고, 기금으로 부처 퇴직자들을 챙겨 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10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단은 잎담배 농가 보호와 지원을 위해 조성된 연초생산안전화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2008년 설

립됐다. 지난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KT&G가 잎담배 농가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폐지되자 기재부 산하에 재단으로 운영돼 왔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07년 말까지 징수한 연초 안정화 기금 3,000억원과 KT&G 주식출연 1100억원 등 총 4,100억원이었으나,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쉼련 한 갑당 5원을 추가 징수해 현재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2) '로비창구' 의혹 받는 세정협의회

세무서와 민간이 '소통창구'로 함께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각종 특혜 창구로 쓰였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대지 국세청장이 폐지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가 전관에게 사후뇌물을 주는 로비 단체로 전락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서울 성북세무서를 제외한 129개 세무서가 세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 1971년부터 대민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당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원 정도, 과장들은 5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년에 최대 5억원까지 수령한 퇴직자도 있다고 한다. 고문료 명목으로 '사후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상이나 세무서장 표창을 받고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보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청장은 "세정협의회는 1970년대부터 민간 소통창구로 이용돼 왔는데 부적절한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협의회를 존속하지 않는 방안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 이원태 KISA원장, 과거 배우자 일거리 제공해 경고받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8일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과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위원 시절 배우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에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직책을 활용한 가족혜택이 만연하다, 이 원장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태 원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위원 시절 배우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

해관계의 신고 등)를 위반으로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서 수행되는 과제의 자문회의에 17차례나 배우자를 참여시켜 자문·평가비를 수령해 간 것이다. 허 의원은 질책 끝에 이 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4) LH 출신 감정평가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평가 용역을 LH 출신 감정평가사에게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361건의 감정평가를 외부 용역을 줬는데, 이중 4분의 1 수준인 85건은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수입 평가사 99명 중 20명이 LH 출신이었다. 이들은 전체 용역 184건 중 62건(33.7%)을, 지급 수수료 71억8천만원 중 27억9천만원(38.9%)을 수입했다. 허 의원은 “감정평가 수입 현황을 보면 전관의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LH 출신 감정평가사 중에는 2018년 한 해에만 21건을 도맡아 수수료만 7억 9천만원을 챙긴 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2021년도 국정감사 전반의 화제성(話題性) 자료*

1. 관심을 끈 국정감사장의 '사과'

(1) 홍남기 부총리의 '초과 세수 사과'

10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고 있는 것을 공식 사과했다.

기재부는 본예산을 짤 때 올해 국세 수입을 280조 원대로 추계했는데, 실제로는 31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

* 현장감과 팩트확인을 위해 신문·방송의 보도내용을 일부 그대로 원용하였음을 밝힘 (이하 같음)

한 정확하게 하는 게 경제 왜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1년 예산을 짤 때 세입 예산을 고려해 국채 발행 계획 등을 세우는데,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국채 발행 비용 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세수 오차 때문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과 비교해 30조 원 넘게 늘렸다. 그러나 초과 세수가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년 세수 추계의 신뢰성까지도 의심받고 있다.

(2)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논란 사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월 5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장은 이날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불리는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논란이 없도록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환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일정을 더 앞당겨서 진행하겠다”며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저렇게 (카카오를) 지배하면서 선물옵션으로 돈을 버는 등 재테크 회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주회사인지 금융회사인지 구분이 안 간다. 금산분리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보고서를 보니 오너들 가족끼리 돈놀이하는 놀이터 같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의 지주회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며 “우리나라 재계 대표 인물로서 경영 철학을 정립해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지주사가 아니다”며 “창업 생태계를 한국에 이식하기 위해 카카오 이전에 창업한 회사다. 2007년 카카오 설립 이후에는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사업의 모든 진행을 멈췄다”고 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3) 기동민 의원의 국정감사 ‘파행 사과’

10월 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예정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장동 특검 피켓으로 인해 파행되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서욱 장관에게 사과하는 사진이 공개되었다.

(4)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의 '재차 사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내 직원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아울러 그간 네이버가 사내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을 받은 이후 시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들었다”며 “빠르게 시정할 부분을 시정하려고 하며, 별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챙겨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내부적으로 여러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고인의 여러 사망 관련 부분들에서 저 역시 많은 충격을 받았고 바꿀 부분들은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바꿀 부분은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고인과 유가족, 네이버 직원 등에 대한 사과의 뜻도 재차 나타냈다. 한 대표는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사과하고, 동료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사과한다”며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할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언급했다.

(5) 임지현 관세청장의 '유령 청사 사과'

국정감사에서 일명 '유령 청사' 논란을 일으킨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임지현 관세청장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분양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지현 관세청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 출석해 관평원 특별분양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관세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평원은 지난 3월 LH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세종시에 청사를 신축하고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나도) 평생 공직에 있었지

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이를 두고 우리 행정기관의 막가파식 무대포, 무능,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특별분양 사태가 불거진 후 관세청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관평원 직원이 전체 82명인데 전원이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분양 받은 49명에서 입주시기가 도래한 19명 가운데 실제 입주는 9명, 9명은 전세, 나머지 한명은 아파트를 전매했다”며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질타 받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관세청 후속 조치를 보면 아무 일 없던 듯 지나가려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6)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불가리스 사과’

10월 5일과 8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 매각 무산 논란, 가맹점주와 갈등 등에 대한 지적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홍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남양유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과서다.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다”고 했다. “회사를 매각하려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남양스럽다고 한다”는 질의엔 “ESG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매각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매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을 빨리 마무리해 주주와 종업원, 대리점 등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7) 국정감사장에 꾸벅꾸벅하다가 “꾸벅” 사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도중 졸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실시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오가는 도중 박 위원장이 보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나. 오전에는 임이자 간사가 잘못 보고 오후에는 위원장이 (조는걸) 잘못 봤다는 말이나”면서 “하도 졸고 있으니 가볍게 잠 좀 깨워드리려 한 말을 왜 잘못 본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어 “멀리서도 고개를 꾸벅꾸벅하고 조는 게 보여 그걸 보고 말한 건데 그렇지 않다는게 무슨 말이나”고 재차 지적하자 박 위원장은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답했다.

2. 감사활동에 대해 사과요구를 당한 의원

(1) 문화체육관광위 정청래 의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국정감사 중 발언에 대해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장단은 지난 10월 5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와 본인의 유튜브 등에서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폄하하고 사찰이 국민들을 갈취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정 의원의 부족한 역사 인식과 문화재에 대한 식견을 보여준다고, 사찰이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역사 동안 가꿔 왔고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정 의원이 불교계의 노력을 비하하고 사부대중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하고 문화재 보존·유지 계승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2)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장 승진제도를 희화화하고 전체 교사를 모욕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의원은 교장 공모제를 옹호하고 현행 교장 자격제도를 비판하면서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비위만 잘 맞추면 될 수 있는 자리로 희화화했다”며 “교육에 대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자기성장을 통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를 모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등 국가는 교장 자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학교에서 근무할 때 15년 중 마지막 3년은 교장에게 근무평가 1등수를 받아야 (교장을) 할 수 있었다”며 “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근무 시간에 교장 차를 가지고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대신해 주는 등 비위를 맞춰야 했다”고 주장했다.

IV. 매일매일 깜짝 놀란 통계 및 자료 편린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국회의원 게시 감사자료⁴⁾ * 중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에는 국회의원 보도자료와 정책자료가 올라오고 있는 바, 문재인 정부에서도 낙하산, 비리, 혈세낭비 여전함을 알려 주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즉, 국정감사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매일 매일 국정감사모니터통신에서 요약발췌한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21년 10월 1일(금)

■ 유은혜 장관, “서울대에서 5600만원 받은 조국, 합당하지 않아”

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후 20개월 간 5,6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수업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은 유은혜 장관에게 “조국 교수처럼 직위 해제된 교수가 수업이나 연구 활동 이런 정상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위도식하면서 수 천만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반칙이고, 특권이고, 불공정한 일”이라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 박정 의원, “넷플릭스 비디오물 심의건수 국내 OTT 2배”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국내 OTT와 해외 OTT의 비디오물 사전등급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국내 OTT와 해외 OTT의 비디오물 격차는 2018년 87.2배에서 2021년 8월 2.1배로 많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외 OTT 넷플릭스의 비디오물이 심의건수가 국내 OTT의 비디오물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물 심의는 판권을 가진 비디오물에 대해 사전등급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 수치가 OTT들의 독점 콘텐츠로 봐도 무방하다.

이용자 현황도 넷플릭스가 37%로 전체 OTT 중 절대적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대표적인 OTT 웨이브는 18%를 차지하고 있다.

■ 서영교 위원장 1% 공무원이 물 흐려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2만 공무원 중 약 1%인 1만 1,200여명의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고소·고발 포함)의 피의자였던 것으로 집계돼, 1% 미꾸라지 공직사회의 물을 흐린 것으로 드러났다.

■ 윤관석 의원, 10년간 일본수산물이 타국산으로 둔갑한 사례 총 370건, 이 중 60%(223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

* 해당 통계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은 의원실에 있으며, 통계관련 문의는 의원실로 하시면 됩니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1일(금) 열린 정부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10년간 일본수산물에 타국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총 370건이 적발됐고 이중 60%(223건)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었다며, 일본산 수산물을 속여서 들여오는 유통업자들에 대한 단속강화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등 엄격한 대응 관리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전문사관' , 1·2기 전역자 배출 후에도 ADD 근무자 없어

2014년 한국형 탈피오트를 꿈꾸며 미래부(現 과기부)와 국방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에 대하여 운영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역한 1기와 2기 사관 중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남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조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역 사관 총 38명 중 20명(52.6%)은 진학, 14명(36.8%)은 취업, 1명은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한 사관 중 가장 많은 인원(3명)이 취직한 업종은 국방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이었다.

■ 서범수 의원, 마스크 수급 원활한데도 약 14억 치 수의계약으로 구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17개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 작년 10월 이후로 체결된 마스크 수의계약 사례들 중 12건, 금액으로는 14억 원가량의 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가 매우 짙다고 밝혔다.

■ 김영배 의원, 최근 3년간 169명 중 145명(86.1)이 미국 연수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법원 공무원 총 169건의 해외연수 중 145명(86.1)이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우리나라와 사법제도가 자체가 다른 미국만 줄곧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판사의 경우 10년, 대법관의 경우 6년의 임기를 갖고 연임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연방 대법관뿐 아니라 연방법원의 법원 모두가 종신직으로 규정돼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달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능이 분리돼 있지 않다. 미국 외에도 일명 법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이나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최근 4년 내 독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원 공무원은 달랑 한 명 뿐이다

■ 윤영덕 의원, 응답대학 80% 이상이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필요없다고 답해

윤영덕의원실이 자체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대학 80% 이상이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필요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대상 : 일반대학 48곳, 전문대학 99곳. 설문기간 : 9월23일~9월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교육부는 고등교육에 있어 도대체 무엇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번에 걸쳐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방향도 옳고 목표 달성도 못했다”고 일갈했다.

2. 2021년 10월 5일(화)

■ 민형배 의원, 통일부 법무부 C 학점

통일부와 법무부가 최근 5년간 4차례나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등급인 C를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평가에서 장관급 부처로는 통일부·법무부·여성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이 중에서 통일부와 법무부는 매년 진행되는 연도별 정부 업무평가에서 2016년 이후 다섯 차례 평가 중 네 차례나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국정과제 수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A(우수), B(보통), C(미흡)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차관급 부처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16년 이후 네 차례나 C등급을 받았다.

■ 윤관석 의원,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증가세... 7년간 사고 582건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8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0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는 2014년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4년 54건, 2015년 55건, 2016년 76건, 2017년 104건, 2018년 80건, 2019년 90건, 2020년 123건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중교통보다 렌트차량을 선호하는 세태가 겹치면서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123건의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 최인호 의원, 농지위법사용 이행강제금 체납액, 5년간 총 130억원에 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를 불법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지난 5년간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1월~2021년 8월)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은 총 608건, 129억 4,307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84억 7,859만원이었고, 부산이 18억 5,513만원, 제주도가 15억 5,268만원, 경남이 4억 3,914만원 순이었다.

■ 박재호 의원, 올해 경찰관 징계 건수(300명)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커졌는데, 경찰의 징계가 늘고 기강이 무너진 것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19년~’21년 8월) 경찰청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경찰관 수는 ‘19년 428명, ’20년 426명, ’21년 8월까지 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해당연도 8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19년 269건, ’20년 260건으로, 올해 경찰관 징계 건수(300명)는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민국 의원, 공정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심사 2년 3개월째 1차 심사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심사가 2년 3개월째 심사 중이며, 신고대상 6개국 중 가장 먼저 심사 신청되었으나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만이 1차 심사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부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 국가 6개국 중 3개국(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개국(한국, 일본, EU)은 심사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박재호 의원, 자격이 되어도 참전명예수당 받지 못한 미수급자 전국 3천여명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가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이(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지자체별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3,021명의 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으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미지급자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8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696명, 전북 365명, 서울 335명 순이었다.

■ 이만희 의원, 도시민 농촌 파견근로 사업, 목표 인원 1,000명 중 42명 참여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촌인력 대응 차원으로 추진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이 중단되자 국내 농촌은 농번기와 수확기에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패닉에 빠졌다.

농업 분야 일일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11~12만원 수준이었던 인건비가 올해 16~17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마저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수확에 차질을 빚었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된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사업 목표 인원 1,000명 중 현재까지 경기 연천 22명, 강원 태백 12명을 비롯해 42명 참여,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참여 인원은 신청 인원 1,116명 중 실제 참여 인원은 202명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21년 10월 6일(수)

■ 서일준 의원, 불법 도박장 규모 7조원 이상 증가에도 文정부 단속검거 실적 대폭 감소

2019년 불법 도박장 규모가 2015년에 비해 7조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속·검거 건수는 매년 줄어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도박장 규모 추정치’ (4년마다 규모 예측 연구 용역)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에는 4년 전에 비해 불법 도박 추정 규모가 20.7% 감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에는 불법 도박 규모 추정치가 2015년에 비해 18.8% 증가한 47조 5,007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불법 도박장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검거 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0,388건이던 검거 건수가 2020년에는 37.4% 하락한 6,497건이 되었다. 같은 기간 단속 건수도 7,388건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4,010건이 되어 문재인 정부가 불법 도박장 단속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 강민국 의원,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 제재건은 8개월째 STOP

국회 정부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금융위 안전소위 부의 안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2021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전소위로 올린 안전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전은 총 37건이었다.

부의 횡수별로 살펴보면, 2회 29건, 3회 7건, 6회 1건이었으며, 기간별로는 1달 이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안전소위에서 검토 완료까지 204일이나 걸린 안전도 3건이나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소위에서 아직도 검토 중인 안전이 8건이며, 여기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주), 대신증권(주), KB증권(주))에 대한 금감원 제재안이 안전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로 그동안 총 3차례 논의 되었으나 214일이 지난 현재(9.27.)까지도 검토는 완료되지 못하였다.

■ 권명호 의원,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부채 20년 130조4700억원→25년 164조4797억원 급증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5일(화),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전, 한수원을 비롯해 5개 발전사(동서, 남부, 남동, 중부, 서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권명호 의원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에서 받은 ‘중장기 재무전망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9조7721억원이던 한전의 부채는 5년 뒤인 2025년에는 81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는 2020년 36조784억원에서 2025년 38조8914억원, 한국동서발전 부채는 5조583억원에서 7조5425억원, 한국남동발전은 6조6048억원에서 8조6062억원, 한국남부발전 6조7283억원에서 9조3350억원, 한국서부발전 6조6016억원에서 8조2704억원, 한국중부발전 9조6265억원에서 10조7640억원으로 6개 자회사 모두 2조~3조원씩 부채가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들어 7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4년 동안 130조원가량으로 늘어났으며, 부채 규모는 2025년 165조원까지 또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 정운천 의원, 코로나19 이후 경마 운영 제한으로 마사회 매출 11조원 가까이 감소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경마 운영 제한으로 한국마사회 매출이 급감해 그에 따른 세수감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작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경마 운영이 제한된 올해 8월까지 입장객은 1,935만 7,800명이 감소했고, 매출은 2020년 6조 2,682억원, 2021년 8월까지 4조 7,302억원으로 총 10조 9,98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국세(농특세)와 지방세(레저세 등)의 세수감소액은 2020년 1조 29억원, 2021년 8월까지 7,568억원으로 총 1조 7,597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마사회는 2017년 1,565억원, 2018년 1,264억원, 2019년 938억 원 등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축산발전기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장섭 의원, 신규벤처투자금 79.4%, 벤처캐피탈의 91.3%, 엑셀러레이터 66.4%

수도권 집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전국 광역지자체별 벤처기업확인 기업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벤처 기업이 56.7%(8,415개)가 늘어나는 동안 지방은 고작 32.1%(3,630개) 늘어나, 수도권 벤처기업 비율은 2011년 56.7%(14,837개)에서 2021년 60.8%(23,252개)까지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반면, 지방의 벤처 생태계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지역 벤처 기업 분포 비율은 세종 0.4%, 제주 0.6%, 울산 1.3%, 강원 1.9%, 광주·전남 2.1%, 전북 2.2%, 충북 2.8% 순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주, 전남, 강원,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수도권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아기유니콘 기업 100곳 중 88개(88%), 예비유니콘 기업 57곳 중 50개(87.7%)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질적으로도 그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총신규벤처투자 금액은 1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어났지만, 수도권 투자금액 비율은 2010년 74.3%, 2015년 84.8%, 2020년 78.2%로 수도권에 80%가량이 집중돼 있었다

■ 서일준 의원, 불법 도박장 규모 7조원 이상 증가에도 文정부 단속검거 실적 대폭 감소

2019년 불법 도박장 규모가 2015년에 비해 7조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속·검거 건수는 매년 줄어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도박장 규모 추정치’ (4년마다 규모 예측 연구 용역)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에는 4년 전에 비해 불법 도박 추정 규모가 20.7% 감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에는 불법 도박 규모 추정치가 2015년에 비해 18.8% 증가한 47조 5,007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불법 도박장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검거 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0,388건이던 검거 건수가 2020년에는 37.4% 하락한 6,497건이 되었다. 같은 기간 단속 건수도 7,388건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4,010건이 되어 문재인 정부가 불법 도박장 단속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 이태규 의원, 2억 4,000만원 중 2억원(85%)을 선물·주류 비용으로 쓴 주중대사관

(선물·주류비용 집행액 85%) 주중대사관의 20년-21.7월까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액 약 2억 4,180만원(20만 3,756불) 가운데 약 2억 260만원(17만 2,796불)를 선물 및 주류 비용으로 과다 집행함. 이는 39개 공관 가운데 단연 최고 수치

- (비공개 외교인사 접촉실적 저조) 해당 공관의 비공개 외교활동 관련 인사접촉 건수도 연 두자릿수로 매우 저조, '17년 대비해도 '20년 17%, '21.7월 기준 7% 수준으로 급감
- 사실상 주중대사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선물 및 주류 비용으로 전락함. 주중대사관이 코로나 핑계로 비공개 외교활동은 접어둔 채 사무실에 앉아 선물만 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특성상 공안 통제 및 코로나 등으로 대면접촉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임.
- 또한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지침(대외비)」 상에는 과도한 선물·주류 비용 집행을 삼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윤관석 의원, 4년간 쌓인 숨은보험금 3조2천억원, 35% 증가

지난 4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숨은보험금이 3조2천30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받은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2017.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조3천209억원(사망보험금 포함)을 찾아주는 동안 찾아줘야 할 숨은보험금은 2017.12월 9조1천669억원에서 올해 8월 12조3천971억원으로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지만,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 또는 조건이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만기보험금, 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4. 2021년 10월 7일(목)

■ 신현영 의원, 사유리 불출석

비혼 출산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의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출석이 불발됐다.

사유리는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측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신 의원측이 7일 밝혔다. 신 의원 측은 “비혼 출산 과정에서 응원도 많이 받았지만, 상처도 받았으며 국감장 출석에 난색을 보여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 허영 의원, 최근 4년간 LH 감정평가 ‘전관 수입’ 최대 39%

LH 감정평가 연간 물량의 최대 34%, 지급 수수료의 최대 39%를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수입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돼 ‘전관특혜’라는 지적이다.

7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121억원을 들여 174명의 감정평가사들에게 361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맡겼다. 이 중 85건은 25명의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했다. 전체 물량의 약 4분의 1 정도를 전관이 가져간 것이다.

2017년에는 수입 평가사 99명 중 20명이 LH 출신이었는데, 이들은 전체 용역 184건 중 62건(33.7%)을, 지급 수수료 71억8,000만원 중 27억9,000만원(38.9%)을 수입했다. LH 출신 여부에 따른 감정평가 수입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관의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범수 의원, 교육시설 부족으로 신입소방관, 필수교육도 못받고 현장 배치

소방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 대책 마련 시급하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입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시설 부족으로 채용 당해연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배치되고 있어서 소방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계획에 따라 2018년 5,057명, 2019년 5,524명, 2020년 4,844명, 올 6월까지 4,484명 등 매년 5,000여명 내외로 신규 채용을 늘려오고 있다.

문제는 신입소방관들을 교육하는 교육훈련시설이 부족하여 2018년에는 449명, 2020년에는 627명이 채용 당해연도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올해 6월 현재 1,576명의 신입 소방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

소방청은 신입소방관의 교육미이수 해소를 위해 교육기간을 기존 24주에서 15주로 줄였지만 늘어난 교육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 박재호 의원, 승강기 내 인명사고, 3년 새 4배 증가

승강기에서 발생한 인명사고가 최근 3년 새 4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승강기 인명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237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2017년에 27건에 불과하던 승강기 인명사고는 2018년 21건에서 2019년 72건으로 급증하였고, 2020년에는 86건으로 증가하였다.

사고 발생 유형을 보면, 이용자 과실이 전체 사고 중 47%(112건)를 차지하였고, 작업자 과실이나 유지관리 업체 과실이 각각 13%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9건, 부산 28건, 대구와 경남이

각각 15건이 발생하였다.

■ 김영배 의원, 최근 3년 검열 통해 언론사로 발송 금지한 교정시설 처우 관련 서신 69건!

1987년이 아니다. 2021년에도 여전히 교도소에서 편지를 검열해 언론사로 내보내려는 제보를 불허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9건이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을 이유로 발신 불허됐다. 검열 후 불허된 편지 대부분이 언론사로 향한 편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발신편지 중 45,524건에 대해 검열이 있었다. 현재 약 10명의 서신 검열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관련 자들도 수발신 검열 대상자이었다. 한편, 이재용과 최태원 등 재계 인사는 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 이만희 의원, 포스트 해운재건 준비해야!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10월7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해운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글로벌 해운트랜드에 발맞춘 포스트 해운재건 계획의 필요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이후 암울했던 한국해운이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서서히 회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서두를 열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해운정책이 선사들의 선박 확충이나 화물 확보와 같은 일차원적인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 이장섭 의원, 한계기업 15%, 제조중소기업 중 성장정체 기업 20%로 증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과 20년 이상 정체된 ‘성장정체기업’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사업전환 지원을 촉구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해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을 말한다. 지난 9월 24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 비율이 15%를 넘어섰다. 이는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 8월 발표된 산업연구원 연구 보고서 〈성장정체 중소기업의 실태 및 대책〉에 따르면 국내 제조 중소기업 중 업력이 20년 이상이지만, 종사자 수는 50인 미만으로 성장이 정체된 ‘성장정체기업’이 20.5%에 달한다. 이는 2009년 9.6%에서 2019년 20.5%로 최근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장정체의 원인으로는 기업요인(40%)보다 시장의 과당경쟁과 시장의 낮은 성장성, 시장 규모 등 시장요인(60%)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일준 의원, 역외탈세 부과금액 8년 연속 1조 넘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서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했다가 조세당국이 적발해 과세한 돈이 8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서고 한 건당 탈루액도 6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교묘해지는 탈세기술에 맞춰 조세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역외탈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세청은 연 평균 222건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1조 3,274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는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내야 하는데도 해외에 자산과 돈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범죄다. 보통 거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다.

국세청이 적발해 세금을 다시 부과한 금액은 지난 2013년 1조 789억원을 기록한 뒤 2019년 1조 3,896억원으로 7년간 연속 증가했다. 2020년에는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1조 2,837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국세청이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전년보다 적극적인 징수가 어려웠던 탓으로 알려졌다.

■ 윤관석 의원 착오송금 금액비교 2017년보다 19.2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6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간편 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편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원, 407만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21배, 7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중 발생한 착오송금이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 2334만원, 2만1,595건으로 금액 기준 19.2배, 건수 기준 8.8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5. 2021년 10월 8일(금)

■ 국세청, 고지서 내놓고 포기한 세금 88조

정부가 고지서를 내놓고도 세금을 받지 못하고 포기한 금액이 총 8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인상 등 세금을 인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만 잘 걷어도 증세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채납액이 98조7,36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정리보류 채납액은 88조 7,961억원으로 전체 누계채납액의 8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채납액이란 징수가능성이 낮은 채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하여 사후 관리하는 채납액으로,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 조승래 의원, 불합격→합격 489명... K-DATA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 논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지난 7월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번복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버 장애 등 미흡한 행정처리로도 물의를 빚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분석기사 실기시험 결과 자동화 채점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해 응시생 점수 중 일부가 ‘0점처리’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체 응시생 2,000여 명 중 489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되며 자격증 취득 결과가 늦어져 하반기 취업 준비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입었다.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번복 처리된 응시생은 1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일부 수험생은 이미 합격 자격증을 인쇄하여 기관에 제출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이후 민원을 제기한 인원은 총 593명이었으며, 실제 점수가 변동된 정확한 인원 수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일준 의원, 학자금 채납 5년새 3배 증가... 청년 5명 중 1명 실업

서일준(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년 총채납액이 2만1천건 227억원 채납이 매년 증가해서 ’ 21

년 6월 기준 4만6천건 54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문제가 큰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17년 1만3천건 145억원 체납에서 ' 21년 6월 기준 3만6천건 449억원 체납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랜섬웨어 피해접수 증가...기업 45% 대응책 마련 못해

국내에서 랜섬웨어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섬웨어는 운영체제가 설치된 자산에 존재하는 파일을 암호화시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악성코드를 말하며 암호화 해제 조건을 금액을 요구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랜섬웨어 피해금액은 2015년 3800억원, 2021년 23조 6000억원, 2026년 84조 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별 랜섬피해 접수현황은 2018년 22건, 2019년 39건, 2020년 127건, 2021년 9월 149건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났으며, 2021년 건수는 2018년 대비 6배나 증가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랜섬웨어 피해접수 발생건수 총 337건 중 306건, 약 90%가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수홍 의원, 국세청 2020년 소멸처리 체납세금 1조3,411억원, 2017년 대비 34배 폭증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부위원회)은 8일 열린 2021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소멸된 체납세금이 2017년 대비 34배 폭증한 원인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홍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액이 1조 3,411억원에 달하여, 2017년 대비 약 34배 폭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액은 2017년에는 396억 원이었으나, 2018년 1,7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019년 3,399억 원 대비 3.9배 증가하는 등 국세징수권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공무원연금 적자 작년 2.5조→2025년 6.2조..."개혁 시급"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조5644억원 상당의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23년 4조5167억원, 2025년 6조292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공무원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당기재정수지에 있어 지난해 0.1% 적자인 공무원연금은 2040년에 0.4% 적자, 2060년에 0.6% 적자로 40년 사이 적자 폭이 6배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개혁안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전금 13조원 이상을 절감하고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보전금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6. 2021년 10월 12일(화)

■ 김정재 의원, 조민 월 400만원 인턴 근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예비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근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이 속한 재단을 산하로 둔 한국전력측은 “의사 면허 취소가 최종 확정 될때까지 (의사 면허)효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부산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민씨가 사실상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한일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학 취소 처분은 사실상 졸업도 취소된다는 것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달에 400만원씩 월급을 받으며 인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강대식 의원, "범죄 경력 있는데도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17명"

신앙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인원 가운데 범죄경력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범죄경력자 중 대체역 심사 인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인원(병역법 무죄확정자 제외) 614명 가운데 17명이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죄내용은 병역법 위반 뿐만 아니라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폭행, 점유 이탈물 횡령, 도박, 절도,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다양했다.

■ 박재호 의원, 충남경찰청 112시스템 전산장비 83.8% 노후

충남경찰청의 112시스템 장비 노후화 수준이 매우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시스템 노후장비 현황'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68대 장비 중 57대 장비(83.8%)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장비별로는 교환기, 전화기 모두 100%의 노후율을 보였으며 네트워크 장비(86.0%)와 서버 장비(82.6%)는 10대 중 8대가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배준영 의원, 청와대에 먼저 준 통계 文정부 4.3배 증가

통계청이 지난해 공표 전 청와대에 사전 제공한 통계가 2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인 출범 전과 비교해 4.3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류근관 통계청장은 “청와대에 사전 제공한 이후 내용이 수정되거나 내용과 관련한 사전 협의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류 청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통계를 사전 제공한 뒤 공표한 통계의 내용이 달라진 적 있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소병훈 의원, KTX 미사용 마일리지 971억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용객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9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X 누적 마일리지 총 3020억원 가운데 32.1%에 해당하는 971억원은 미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KTX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폐지됐다가 이용객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재도입됐다. 코레일 이용객은 승차권 구매 시 결제 금액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으며, 해당 마일리지는 열차표 구매 시나 역사 내 유통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KTX 미사용 마일리지는 △2017년 348억원 △2018년 250억원 △2019년 230억원 △2020년 6억6000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에는 7월 기준 소폭 증가했다.

■ 장혜영 의원, 4년간 산재 사망사고 낸 업체 국가계약금액 3700억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체와 국가가 지난 4년 간 맺은 계약 금액이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기관·공공기관 등이 2017~2020년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3710억원이다.

이중 조달청이 계약과정에 관여하는 중앙 조달 금액은 전체 86%인 3179억원에 달했다. 잦은 산재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던 대우건설은 2950억원을 계약했다.

■ 김희재 의원, 10분~20분 지연' 열차 5년간 2만7천건..."20분 이상만 배상"

최근 5년간 지연배상을 받지 못하는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 지연 피해승객이 2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열차 지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 지연건수는 2만6688건, 피해승객 수는 2042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열차가 지연됐음에도 2000만명이 지연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국철도공사가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서만 배상 규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선교 의원, 광주 산사태 3년간 약 60% 증가

광주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6484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2만1406개소에 비해 5078개소 증가한 수치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수도 5년 전보다 1만명 이상 늘었다. 2016년 5만3960명에서 2017년 6만1066명, 2018년 6만5905명, 2019년 6만7690명 등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6만930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감 개선 제안

-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중복국감을 막아라
-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라 - 혈세낭비·비효율
- 국정감사법대로 30일 국감을 시행하고, 전반10일에 현장시찰과 증인신문을 하자.

○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리민복상 평가 등

이번 2021년도 국정감사 평가는 2021년도 종합 평가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에서 할 예정이다

《참고 : 자료 22년간 국정감사 총 감사일수와 대상기관수 현황》

국회	대통령	연도	국회의원 정수 (감사위원)	상임 위	총 감사 일	대상 기관 (실시)	현장 시찰
제15대 국회 (1996.05.30.~2000.05.29.)	김대중	1999	299 (298)	16	183	352	18
제16대 국회 (2000.05.30.~2004.05.29.)	김대중	2000	273 (272)	16	188	357 (355)	23
	김대중	2001	273 (269)	16	187	402 (392)	31
대선	김대중	2002	273 (271)	17	159	365	17
	노무현	2003	273 (271)	17	170	399	24
제17대 국회 (2004.05.30.~2008.05.29.)	노무현	2004	299 (298)	17	190	457 (356)	31
	노무현	2005	299 (295)	17	174	461	16
	노무현	2006	299 (296)	17	180	510	40
대선	노무현	2007	299 (298)	17	160	488	20
제18대 국회 (2008.05.30.~2012.05.29.)	이명박	2008	299 (298)	16	168	478	32
	이명박	2009	299 (289)	16	168	478	25
	이명박	2010	299 (271)	16	166	514	26
	이명박	2011	299 (295)	16	157	563 (556)	30
제19대 국회 / 대선 (2012.05.30.~2016.05.29.)	이명박	2012	300 (299)	16	163	559	27
	박근혜	2013	300 (297)	16	169	628	24
	박근혜	2014	300	16	163	672	11
	박근혜	2015	300	16	161	708	21
제20대 국회 (2016.05.30.~2020.05.29.)	박근혜	2016	300	16	161	691	22
대선	문재인	2017	300	16	163	701	27
	문재인	2018	300 (297)	17	168	753	24
	문재인	2019	300 (296)	17	159	788	20
제20대 국회 (2020.05.30.~2024.05.29.)	문재인	2020	300 (299)	17	137	705	8
	문재인	2021	300 (296)	17	135	745	8 (계획)

* 원 자료 출처 : 국회사무처 연도별 국정감사 및 조사 통계자료집 및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수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였음(계획과 시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음, 현장시찰은 국정감사와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음, 예컨대 같은 날 반이 나누어져 시행되는 경우나, 오전 또는 오후에 시찰을 하고 국감 진행, 정보위 포함)

2021년도 국감 전반전 간이평가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